

# 장기실업자의 구조변화 및 정책과제

## 목 차

I. 서 론 .....	1
II. 장기실업의 구조와 추이 .....	4
1. 실업과 고용의 변화추이 .....	4
2. 장기실업자의 특성과 변화 .....	14
III. 장기실업자의 생활 .....	34
1. 장기실업자의 경제 상황 .....	34
2. 장기실업자의 생활만족도 .....	51
IV. 장기실업자의 구직활동 .....	54
1. 직장탐색 .....	54
2. 장기실업자의 희망임금 .....	71
V. 장기실업자의 재취업과 임금변화 .....	77
1. 임금하락의 이론적 배경 .....	77
2. 재취업과 임금상실 .....	79
VI. 결론 및 정책과제 .....	85
참고문헌 .....	91
부 표 .....	95

## 표 목 차

<표 II-1> 고용동향 .....	5
<표 II-2> 실업자의 인구학적 특성 .....	8
<표 II-3> 장기실업자 및 미취업자의 규모 .....	16
<표 III-1> 실업자의 생계유지방법: 전체 .....	36
<표 III-2> 실업자의 생계유지방법: 남성 가구주 .....	38
<표 III-3> 1998년도 조사시 실업가구의 경제상황: 소득, 생활비, 저축 및 부채 .....	42
<표 III-4> 1999년도 조사시 실업가구의 경제상황: 소득, 생활비, 저축 및 부채 .....	43
<표 III-5> 1998년도 조사시 가구주 경제활동상태와 실업가구의 경제: 소득, 생활비, 저축 및 부채 .....	44
<표 III-6>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비율: 1998년도 .....	50
<표 III-7>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비율: 1999년도 .....	50
<표 III-8> 개인의 특성과 불만족도: 1998년도 .....	51
<표 III-9> 개인의 특성과 불만족도: 1999년도 .....	51
<표 III-10> 실업자의 특성과 불만족도 .....	53
<표 IV-1> 실업자의 희망 직종 .....	54
<표 IV-2> 실업자의 전 직종과 희망 직종 .....	55
<표 IV-3> 직종과 산업의 전환 희망률: 실업자 .....	56
<표 IV-4> 직종변환 희망률의 결정요인 추정: 로짓모형 .....	57
<표 IV-5> 실업자의 희망 산업 .....	58
<표 IV-6> 실업자의 전 산업과 희망 산업 .....	59
<표 IV-7> 산업변환 희망률의 결정요인 추정: 로짓모형 .....	60
<표 IV-8> 희망하는 고용형태의 분포: 실업자 .....	61
<표 IV-9> 희망 고용형태의 결정요인 추정: 로짓모형 .....	63
<표 IV-10> 실업자의 구직방법과 비중: 1998년과 1999년 .....	64
<표 IV-11> 실업자의 구직기간과 구직방법: 1998년과 1999년 .....	67
<표 IV-12> 사용한 구직방법의 수와 1주당 구직활동 시간 .....	69
<표 IV-13> 1주당 구직활동시간의 결정요인 추정: Logit 및 OLS .....	70
<표 IV-14> 실업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희망임금 .....	72

<표 IV-15> 실업자의 구직활동과 희망임금 .....	74
<표 IV-16> 희망임금의 결정요인 추정: OLS .....	75
<표 V-1> 직장상실과 임금의 변화 .....	80
<표 V-2> 전 직장과 현 직장의 임금함수 추정: OLS .....	84

## 그림목차

[그림 II-1] 실업률의 추이: 분기별, 계절조정치 .....	4
[그림 II-2] 성별 실업률의 변화 추이 .....	7
[그림 II-3] 성별 실업률의 추이: 분기별 .....	8
[그림 II-4] 연령대별 실업률 .....	9
[그림 II-5] 학력별 실업률 추이 .....	11
[그림 II-6] 남성의 학력별 실업률 .....	12
[그림 II-7] 여성의 학력별 실업률 .....	12
[그림 II-8] 비자발적 실업의 비중 .....	13
[그림 II-9] 전직 종사상 지위별 실업자의 구성비 .....	14
[그림 II-10] 6개월, 12개월 이상 장기실업자의 비중과 추이 .....	15
[그림 II-11] 실업자 중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의 비율: 성별 .....	18
[그림 II-12] 장기실업자 중 남성의 비중 .....	18
[그림 II-13]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의 학력별 분포 .....	19
[그림 II-14] 실업자 중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의 비율: 학력별 .....	20
[그림 II-15]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의 연령대별 분포 .....	21
[그림 II-16] 실업자 중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의 비율: 연령대별 .....	21
[그림 II-17]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와 가구주와의 관계 .....	22
[그림 II-18] 실업자 중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의 비율: 가구주와의 관계 .....	23
[그림 II-19]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와 이직사유 .....	25
[그림 II-20] 실업자 중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의 비율: 이직사유 .....	26
[그림 II-21]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와 전직장의 종사상 지위 .....	27
[그림 II-22] 실업자 중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의 비율: 전직장의 종사상 지위 .....	28
[그림 II-23]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와 전직장의 산업 .....	29
[그림 II-24] 실업자 중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의 비율: 전직장의 산업 .....	30

[그림 II-25]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와 전직장의 직업 .....	31
[그림 II-26] 실업자 중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의 비율: 전직장의 직업 .....	31
[그림 III-1] 실업자의 생계유지 방법: 전체 및 남성가구주 .....	34
[그림 III-2] 연령대별 생계유지 방법: '배우자 소득'과 '가족 및 친지 보조' .....	39
[그림 III-3] 고용상태별 가구구성비: 1998년과 1999년 .....	40
[그림 IV-1] 실업자의 희망 고용형태 분포 .....	62
[그림 IV-2] 연령대별 공공직업안내소의 이용률 .....	65
[그림 V-1] 연령대별 전·현직 임금과 변화율 .....	82
[그림 V-2] 학력별 전·현직 임금과 변화율 .....	82
[그림 V-3] 전 직장의 근속기간별 전·현직 임금과 변화율 .....	83
[그림 V-4] 실직기간별 전·현직 임금과 변화율 .....	83

## I. 서 론

외환위기의 충격이 우리 나라를 휩쓸지도 3년이 경과하였다. 그 동안 실업률은 2%대에서 한 때 8% 수준까지 급등하였으며, 수많은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는 실직의 아픔을 거쳐왔다. 심각한 구직난으로 인해 장기실업자의 절대 수는 외환위기 이후 급증하였고, 외환위기가 어느 정도 극복된 작금에도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장기실업 상태에 빠져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실업의 장기화에 따라 빈곤으로 인하여 가구 및 개인의 생계유지가 곤란하여지고, 심각한 사회·심리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흔히들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정부도 장기실업자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장기실업의 예방을 위해 실업자 프로파일링(worker's profiling) 제도를 개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장기실업자가 다른 실업자에 비해 보다 많은 고통을 겪고 있으며, 빈곤에 빠질 위험성이 높다는 점은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또한, 실업의 장기화로 인한 가족의 해체나 개인적 절망과 같은 사회적 문제도 매우 중요한 문제로 여겨진다. 그러나, 어떤 이들이 장기실업에 빠질 위험성이 높은지, 왜 장기간 실업상태에 놓이는지, 장기실업자의 모두가 빈곤에 허덕이는지 등의 구체적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실증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특히 실업자가 자신의 생애기대소득(life-time expected income)을 극대화하려는 합리적 선택의 과정에서 실업이 장기화되는 것인지, 아니면 장기실업이 어떤 직장이라도 취업을 희망하지만 취업기회가 전혀 없어 장기간 실업상태에 빠지게 되는 비자발적·절망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인지도 문제시된다. 만약 배우자 또는 다른 가족이 취업을 하고 있어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걱정이 없으며, 실업자의 기대수준이 높아 의중임금(reservation wage) 수준이 높다면 이는 장기간 구직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장기실업자의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소득지원이나 직업훈련보다는 적합한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반대로 만약 실업의 장기화로 인해 생계유지의 어려움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생계지원을 실시함과 동시에, 생산적 복지의 개념에 입각한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기실업자에 대한 대책은 장기실업자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본 연구에서는 1993년 12월 이후의 경제활동인구조사원자료와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제1차(1998)~제3차(2000)까지의 3개년도 자료를 분석하여 장기실업자의 특성과 행동양식을 이해하도록 한다. 장기실업자의 개념은 실업기간을 어떻게 구분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미국에서는 실업급여가 끝나는 6개월 이상의 실업자를 장기실업자로 간주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도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의 실업자를 장기실업자로 간주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도 6개월을 기준으로 장기실업자를 정의할 것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1993년 12월 이후 장기실업자의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장기실업자의 구조는 외환위기 이후 커다란 변화를 보였고, 또한 외환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된 1999년 중반을 기점으로 새로운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사실들이 제시되고 있다. 제3장에서는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장기실업자의 생계유지방법, 가구의 소득 및 지출, 경제적 애로점, 생활만족도 등을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 장기실업자는 생계유지 자체가 어려운 저소득 계층과 다른 가구원이 취업하여 생계유지에는 큰 애로점이 없는 두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sup>1)</sup> 다음의 제4장에서는 장기실업자의 구직활동 및 희망임금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다. 실업의 장기화에 따라 전 직장과 다른 산업의 취업을 희망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나, 구직활동의 강도가 높아지는 않았다. 또한, 구직기간과 희망임금의 관계도 정(+)으로 나타나 의중임금이 높은 계층이 실업상태에 장기간 놓여있을 가능성이 제시한다. 제5장에서는 장기실업자의 재취업에 따른 임금변화를 측정하여 실업의 장기화가 근로자의 삶에 미친 영향을 소득의 측면에서 이해하려 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의 결론 및 정책과제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

1) 실업자에 대한 분석에는 장기실업자의 분석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연유로 인하여 제3장 이후 내용의 상당부분이 송실대 조준모교수와 공저한 '실업구조의 변화와 정책과제'의 내용과 동일하며, 이 점을 양해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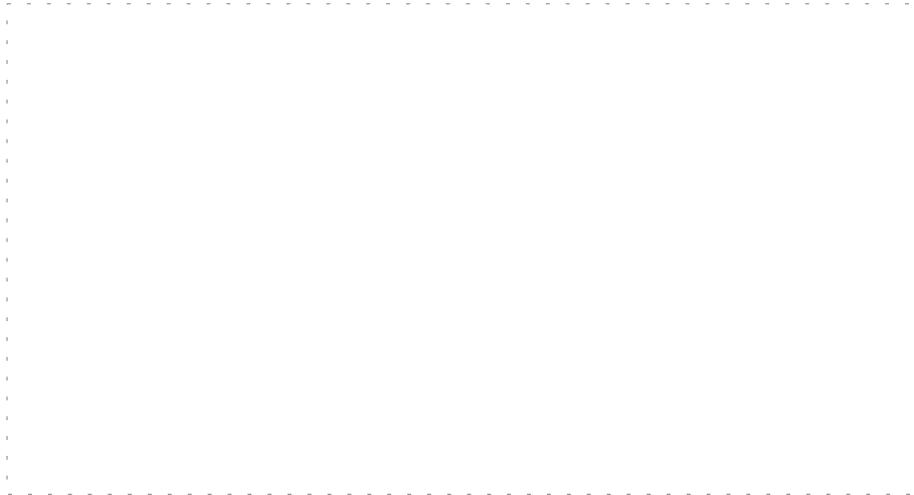
## II. 장기실업의 구조와 추이

### 1. 실업과 고용의 변화추이

#### 가. 최근의 실업과 고용

우리 나라의 실업률은 1988년에 2.5%를 기록하여 최초로 2%대의 낮은 실업률로 진입한 이후 1997까지 10년 동안 2%대를 유지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1997년 말의 외환위기 이후 실업률은 급등하기 시작하여 1997년 4/4분기의 2.9%에 머물렀던 계절조정 실업률은 9개월이 지난 1998년 3/4분기의 경우 7.7%에 달하는 등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실업대란을 경험하였다. 이후 급속한 경기회복과 집중적인 실업대책의 효과로 인해 실업률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아직도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II-1] 실업률의 추이: 분기별, 계절조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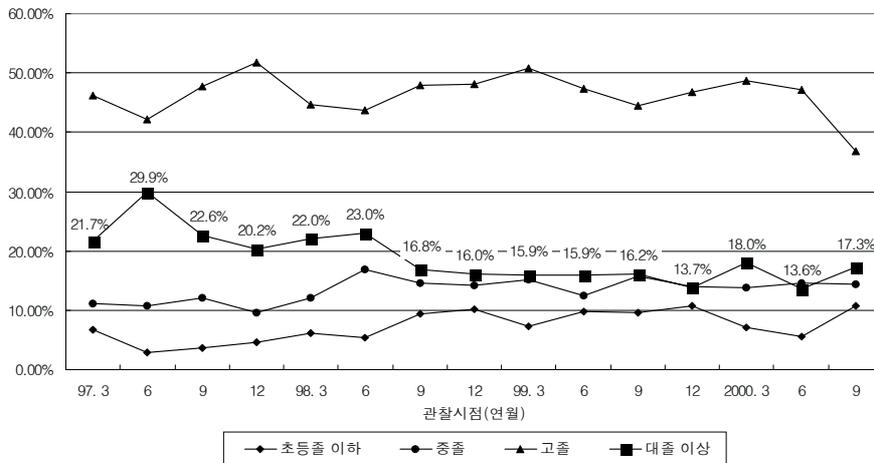


[그림 II-1]과 같이 2000년 3/4분기의 실업률은 3.9%로 우리 나라의 경제수준이나 사회보장 제도에 비추어볼 때 아직 외환위기 이전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고용상황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인 경제활동참가율은 올해 60.8%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어 1997년의 62.2%에 비해 크게 낮고 이에 따라, 취업자수도 1997년의 2,111만명과 비슷한 2,106만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 동안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의 절대수가 증가하였고, 공공근로사업과 같은 실업대책에 상당수의 실직자들이 참여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업문제가 완전히 해결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노동시장의 악화로 인해 취업을 포기한 비경제활동인구가 다수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 실업률의 추가적인 감소를 가로막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구조조정을 통한 노동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책방향 설정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된다.

<표 II-1> 고용동향

(단위 : 천명, %)월의 경우 장기실업자에서 대졸 이상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34.3%에 달하였다 (부도 1 참조). 그러나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중졸 이하의 비중이 증가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그림 II-13]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1998년 이후 장기실업자 중 중졸 이하의 학력자 비중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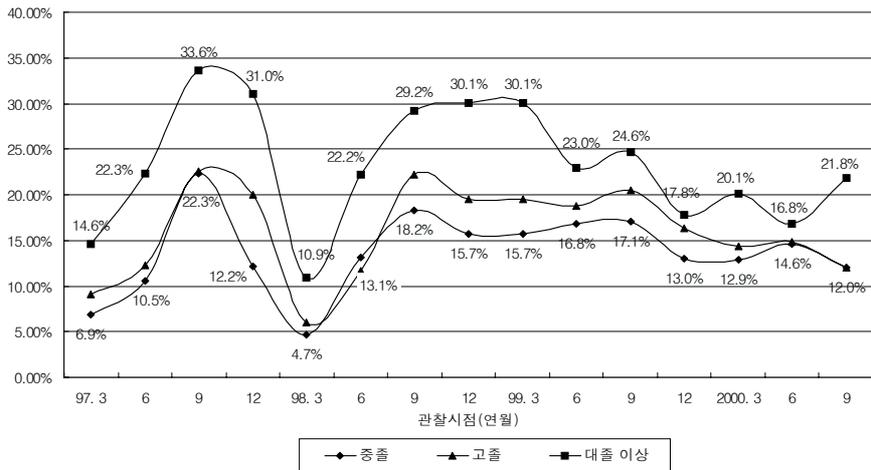
[그림 II-13]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의 학력별 분포



외환위기 이후 장기실업자에서 중졸 이하 저학력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한 현상은 실업자군 전체에서 중졸 이하 저학력자의 비중이 증가하였기 때문이지, 저학력자가 장기실업자가 될 위험성이 높아졌기 때문은 아니다. 학력별로 실업자 중에서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가 점유하는 비율 및 그 추이는 [그림 II-14]에 나타나 있다. 이 그림에서 대졸실업자의 장기실업자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외환위기 이전에도 발견된다. 즉 1998년 12월의 경우 대졸실업자 중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는 30.1%에 달하고 있었으며, 1997년 9월에는 그 비중이 33.6%에 달하였다. 이해 비해 중졸실업자 중 장기실업자의 비중은 1998년 12월 15.7% 수준에 그치고 있었다.

이처럼 대졸 이상 학력자의 장기실업 확률이 높은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대졸자의 경우 가구의 소득 및 자산수준이 높아 장기간의 실업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가정된다. 또한 20대의 젊은 층에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들이 많이 분포되어 부모, 친지 등이 기본적인 생계는 책임지기 때문에 장기간의 실업상태를 지탱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림 II-14] 실업자 중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의 비율: 학력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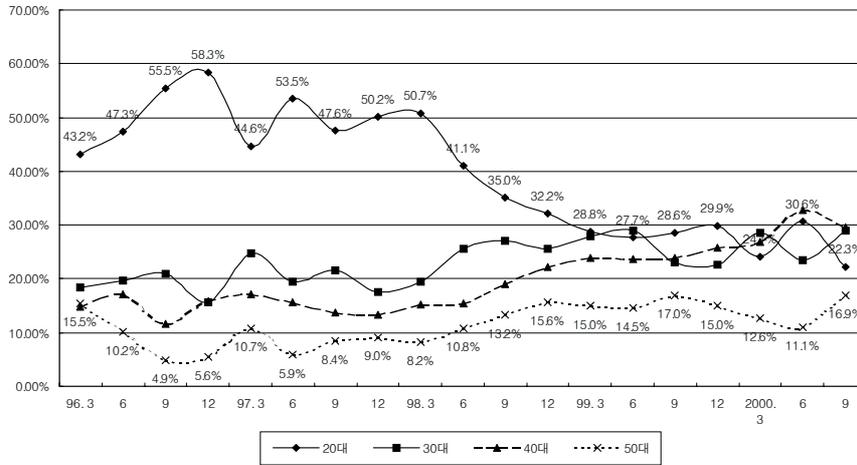


### 3) 연령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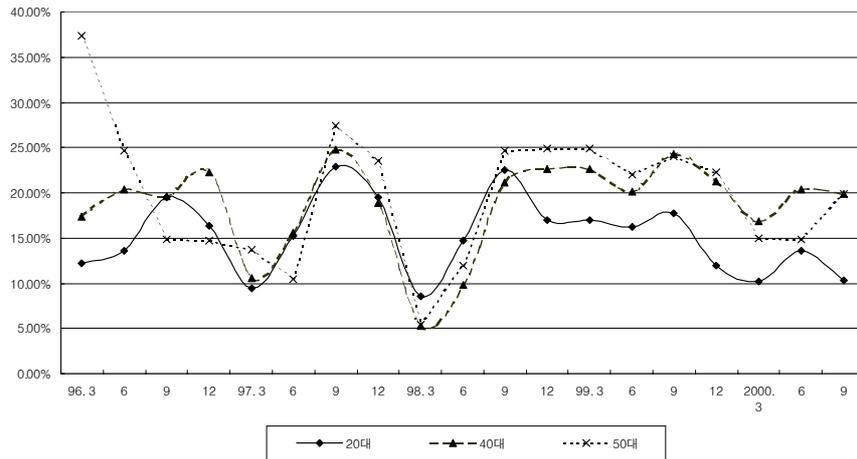
외환위기 이전에는 장기실업자의 거의 절반 정도가 20대의 젊은 층이었다(부표 2 참조). 그러다가 외환위기로 인해 30대 이상의 실업이 급증하면서 장기실업자에서 20대가 차지하는 비중도 30%대 정도로 하락한 것을 [그림 II-15]에서 발견할 수 있다. 장기실업자 중 20대의 비중 감소는 30대 이상 연령층의 장기실업자 증가를 의미한다. 즉 30대의 비중은 1997년 12월의 17.5%에서 1년 뒤인 1998년 12월에는 25.5%로 증가하였고, 40대와 50대도 동기간 중 각각 13.3%와 9.0%에서 22.2%와 15.6%로 급증하였다(부표 2 참조).

그러나 실업자에서 장기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외환위기 이전에도 30대 이상이 20대에 비해 높았었으며, 이처럼 중·장년층의 장기실업 위험이 높은 현상은 외환위기가 진행되면서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부표 6 참조). 즉 [그림 II-16]에서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 12월부터 40·50대 실업자 중 장기실업자의 비중은 20대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높아진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림 II-15]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의 연령대별 분포



[그림 II-16] 실업자 중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의 비율: 연령대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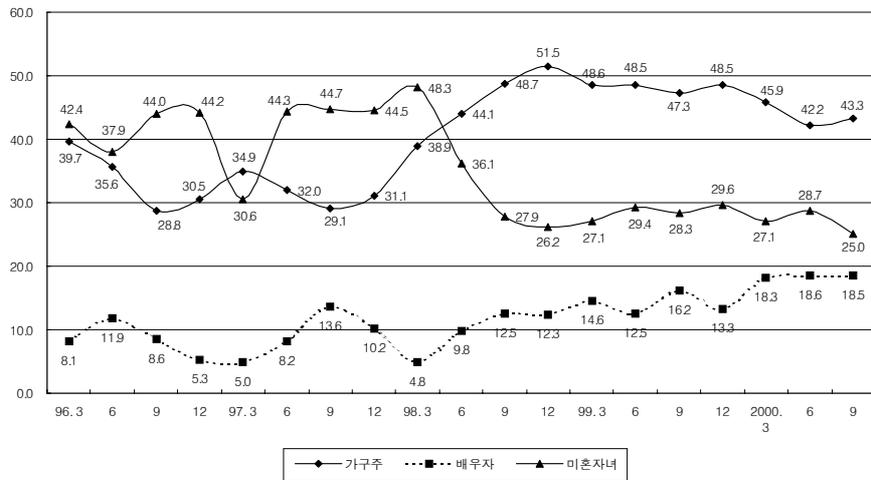
#### 4) 가구주와의 관계

외환위기 이전 30%대를 유지하던 가구주의 비중은 외환위기 이후 40%대로 증가하였다. 장기실업자에서 배우자가 차지하던 비중도 외환위기 이후 증가하였으며, 반면 미혼자녀의 비중은 크게 하락하였다. 이는 <부표 2>와 [그림 II-17]에 나타나고 있는데, 1997년 12월 31.1% 수준에 머물렀던 장기실업자 중 가구주의 비중은 1998년 들어 급증하기 시작, 1년 뒤인 1998년 12월에는 51.5% 수준까지 높아졌다. 이러한 가구주의 비중은 1999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40%대를 유지하고 있었다. 반면 미혼자녀의 비중은 1998년 3월의 48.3%에서 급락하여 1998년 12월에는 26.2% 수준까지 낮아졌으며 이후에도 30%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가구주의 비중이 증가한 사실은 장기실업자에서 30대 이상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의 증가 및 20대 비중의 하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동시에 외환위기가 노동시장 및 가계에

가져온 충격의 정도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장기실업자 중 배우자의 비중이 외환위기 이후 증가한 점도 주목의 대상이다. 1993년 12월에서 외환위기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배우자의 비중은 대부분의 관찰시점에서 10% 이하를 기록하였다(부표 2 참고). 이러한 배우자의 비중은 1998년 6월 이후 증가하여 2000년 6월에는 18.6%까지 높아진다. 배우자의 대부분이 여성인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여성 장기실업자에서 30대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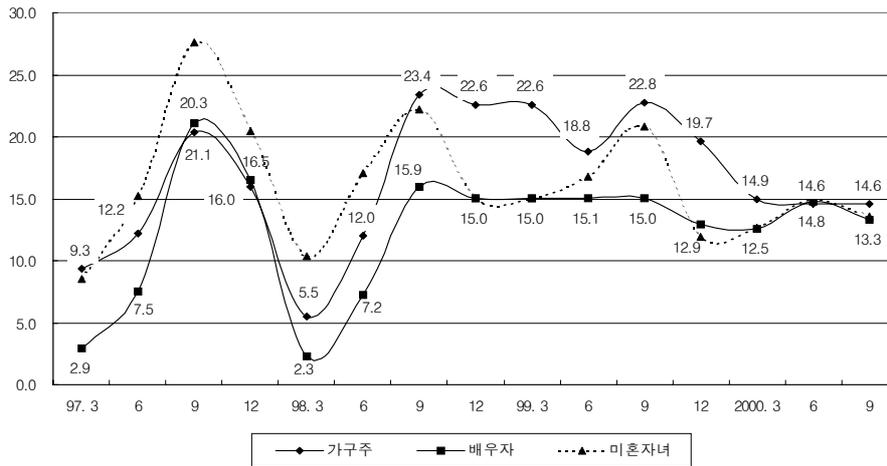
[그림 II-17]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와 가구주와의 관계



연령층의 비중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시사한다. 30대 이상 여성실업자가 적합한 취업기회를 발견하기 어렵거나, 또는 가계가 어렵기 때문에 장기간 취업을 하지 못하여도 계속 구직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여겨진다.

외환위기 이후 가구주가 장기실업자가 될 위험성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구주 실업자 중 6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자 비중은 1999년 9월 22.8%로 배우자의 15.0%보다 7.8%포인트 높다. 이러한 사실은 외환위기 이전과 대비가 된다. <부표 6>과 [그림 II-18]에서 보면 외환위기 이전에는 미혼자녀의 경우 장기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가구주와 배우자 사이는 장기실업자가 될 위험성에 별 다른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1998년 9월을 기점으로 가구주 실업자에서 장기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졌고, 이러한 현상은 2000년 3월 이전까지 지속되었다. 2000년 3월 이후에는 장기실업자가 될 위험성은 ‘가구주와의 관계’와 관련이 없어 보이나 이것이 외환위기 이전 상태로의 회귀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일시적 현상인지는 좀 더 관찰하여야 할 것이다.

[그림 II-18] 실업자 중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의 비율: 가구주와의 관계



## 다. 장기실업자와 전직장의 경험

### 1) 이직사유<sup>2)</sup>

여기에서는 이직사유를 ‘비자발적 이직’과 ‘정년퇴직, 연로’,<sup>3)</sup> 그리고 ‘기타’의 셋으로 구분하였다. ‘비자발적 이직’은 ‘직장의 휴·폐업’, ‘명예·조기퇴직, 정리해고’, ‘임시적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경영 악화’ 등 고용주 측의 사유에 의한 이직을 의미하며, ‘기타’는 ‘개인, 가족적 이유로’, ‘건강상 이유로’, ‘작업 여건 불만족’ 등 개인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이직을 의미하고 있다.<sup>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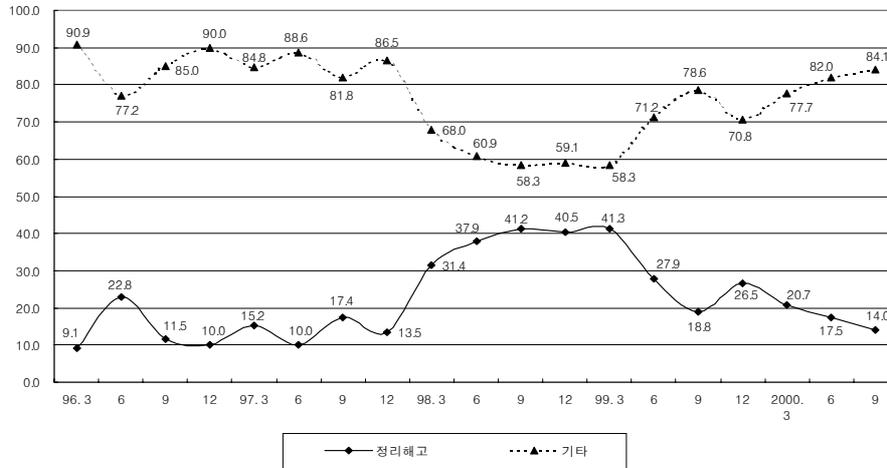
장기실업자 중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이직자의 비중이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증가한 점을 [그림 II-19]에서 발견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장기실업자의 80% 이상이 ‘기타’의 자발적 사유에 의한 이직자였으며, 비자발적 이직자의 비중은 10%대에 머물렀다(부표 3 참조). 그러나 1998년 3월 이후 대량 해고로 인하여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 장기실업자의 비중은 1998년 3월의 31.4%, 6월 37.9%, 9월 41.2%, 12월 40.5%로 급증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1999년 전반기까지 계속되었다. 이후 장기실업자에서 비자발적 이직자가 점유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하여 2000년 9월에는 14.0% 수준까지 하락하고 있다. 장기실업자에서 비자발적 이직자의 비중이 하락한 것은 경기회복으로 인해 정리해고, 명예퇴직, 직장의 휴·폐업 등의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실직자의 절대수가 감소한 것에 주된 원인이 있다.

2) 이직사유 및 전 직장의 특성에 대해서는 1997년 이후 질문의 형식이 두 차례에 걸쳐 달라졌다. 1998년 이전에는 모든 전직 실업자에 대해 이직 사유 및 전 직장의 특성을 질문하였으나 1998년부터는 ‘1년 미만의 전직 실업자’에 대해서만 이를 질문하였다. 또 2000년에 들어서는 응답의 범위를 ‘2년 미만 전직 실업자’로 확대하였다. 따라서, 1998년과 2000년의 두 번에 걸쳐 자료의 불연속성이 문제시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기에서는 ‘구직활동 기간이 1년 미만’인 전직 실업자만을 대상으로 이직사유 및 전 직장의 특성을 분석한다. 따라서 이 절에서 장기 실업자라 함은 구직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실업자를 뜻한다.

3) 정년퇴직 또는 연로로 인해 직장을 이직한 근로자의 비중은 매우 적다. 따라서, 이에 대한 논의는 생략하기로 한다.

4) 여기에서 정리해고는 비자발적 이직을 대표한다. 또한 이직사유에 대한 설문항목이 1998년을 기점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1998년 이전과 이후에 설문문항의 차이로 인한 편기(bias)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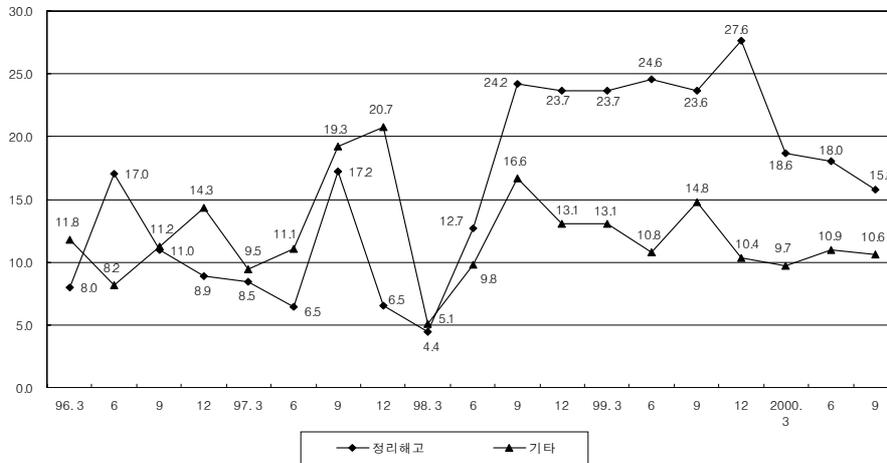
[그림 II-19]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와 이직사유



장기실업자가 될 가능성은 비자발적 이직자가 상대적으로 높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실업자에서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의 비중은 12% 수준을 중심으로 상하로 변동하였다(부표 7 참조). 즉 1993년 12월에서 1997년 12월까지의 4년 동안 비자발적 실업자에서 장기실업자의 비중은 평균 12.17%이었던 반면, 자발적 실업자에서 장기실업자의 비중은 동기간 13.9%로 기록되었다. 따라서 외환위기 이전에는 자발적 실업자가 장기실업에 빠질 위험성이 높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그림 II-20]과 같이 비자발적 실업자에서 장기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1998년 6월에서 2000년 9월까지의 기간 동안 비자발적 실업자에서 장기실업자의 비중은 평균 21.2%로 나타난 반면, ‘기타’의 자발적 실업자 중 장기실업자 비중은 평균 12.0%로 상당한 격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외환위기 이후 비자발적 실업자가 6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에 놓일 위험성이 높아진 원인은 명확하지 않으나 연령이 높은 장기근속자를 중심으로 고용조정이 이루어진 것에 부분적인 이유가 있다. 외부 노동시장이 취약한 우리나라에서 중·장년층 실직자가 재취업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상실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오명효과(scarring effect or stigma effect)를 초래하여 기업이 채용을 꺼려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노동공급의 측면에서도 이들은 장기간의 경제활동을 통하여 생계유지를 위한 저축 및 자산이 있고, 퇴직금이나 퇴직수당을 받았을 확률이 높으며, 신용상태가 상대적으로 좋아 부채를 얻을 능력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처럼 상당기간 동안 생계유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직장에서의 임금수준 또한 높아 의중임금도 높기 때문에 장기간의 실직상태에 놓여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자발적 이직자의 상당수는 재취업에 대한 준비를 갖춘 다음 이직을 하기 때문에 짧은 기간 이내에 재취업이 가능한 점도 또 하나의 원인으로 사료된다.<sup>5)</sup>

5) 특히 외환위기 이후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자발적 이직자들은 재취업에 대한 사전 준비를 충분히 한 다음 이직하여, 실직기간이 짧을 것으로 가정된다.

[그림 II-20] 실업자 중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의 비율: 이직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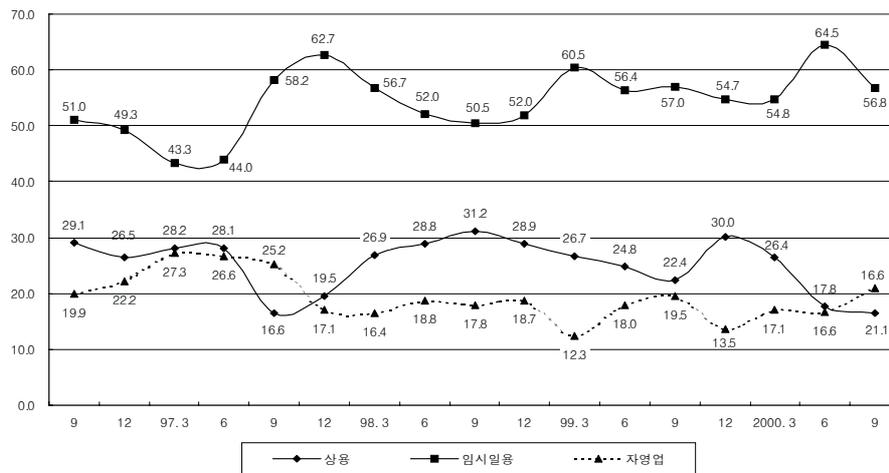


2) 전 직장의 종사상 지위<sup>6)</sup>

구직기간이 6개월에서 1년 미만인 전직 실업자들 대상으로 전 직장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부표 3>과 같이 외환위기를 통해 임시·일용직 근로자였던 장기실업자의 비중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1993년 12월에서 1997년 12월까지의 4년 동안 임시·일용직 출신 장기실업자의 비중은 평균 46.9%이었으나,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 6월에서 2000년 9월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장기실업자 중 임시·일용직의 비중이 평균 55.9%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그림 II-21 참조). 이에 반해 상용직 출신 장기실업자 및 자영업 출신 장기실업자가 장기실업자에서 점유하는 비중은 외환위기 이후 다소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외환위기로 인한 고용조정이 임시·일용직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이에 임시·일용직 실업자의 절대수가 크게 증가한 것에 기인하고 있다.

[그림 II-21]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와 전직장의 종사상 지위

6) 자영업에는 고용주도 포함된다.



그러나 장기실업에 빠질 위험성은 임시·일용직 실업자보다는 상용직 실업자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II-22]에서 외환위기 이전에는 자영업 실업자 중 장기실업자의 비중이 높았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상용직 실업자 중에서 장기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자영업 실업자로 임시·일용직 실업자가 장기실업에 빠지는 경우가 가장 적음을 알 수 있다(부표 7 참조).<sup>7)</sup> 2000년 6월 이후에는 다시 자영업 실업자에서 장기실업의 비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우리 나라의 노동시장이 외환위기를 완전히 극복하여 외환위기 이전의 상태로 복귀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지의 여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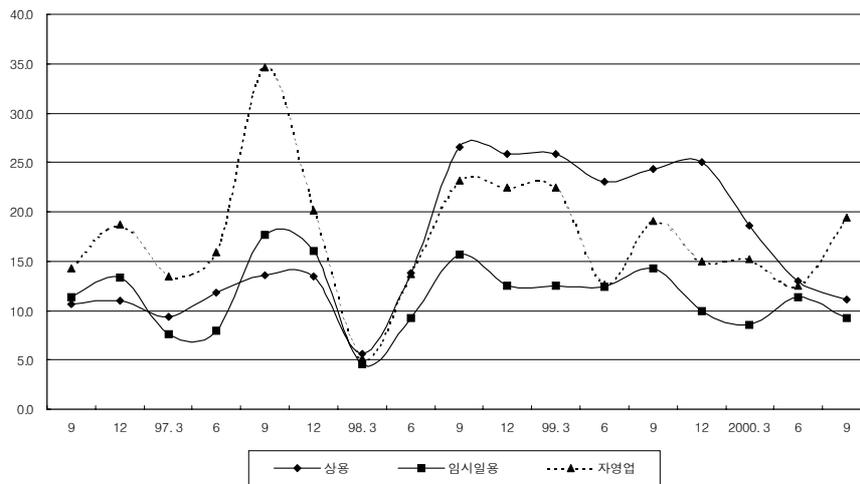
일반적으로 자영업 실업자의 구직기간이 장기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자영업 실업자의 대부분이 다른 자영업 기회를 찾고 있으며, 사업준비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환위기 이전 자영업 실업자에서 장기실업이 많은 것은 상식과 일치한다. 이에 대해 외환위기의 과정에서 상용직 실업자 중 장기실업자의 비중이 높았던 현상은 상용직 실업자의 전 직장 임금수준이 높고, 남성이 많아 의중임금이 높았던 점에 부분적으로 기인한다.<sup>8)</sup> 또한 상용직 실업자의 일부는 퇴직금을 받아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적었던 것도 이들의 실업 장기화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가정된다.<sup>9)</sup>

[그림 II-22] 실업자 중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의 비율: 전직장의 종사상 지위

7) 외환위기 이전인 1993년 12월에서 1997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자영업 실업자 중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비중은 평균 19.8%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해 상용직 실업자는 13.0%, 임시·일용직 실업자는 11.9%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1998년 6월부터 2000년 9월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상용직 실업자 중 장기실업자 비중이 20.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자영업 실업자의 17.6%, 임시·일용직 실업자의 11.6%이었다.

8) 한국노동패널 자료에 의하면 전직 정규직 실업자의 희망임금은 비정규직 실업자의 희망임금보다 20만원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9) 실업자의 생계유지 방법을 살펴보면, 상용직 실업자의 10.8%는 퇴직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저축으로 생계를 유지한다는 비중은 39.7%로 다른 계층에 비해 그 비중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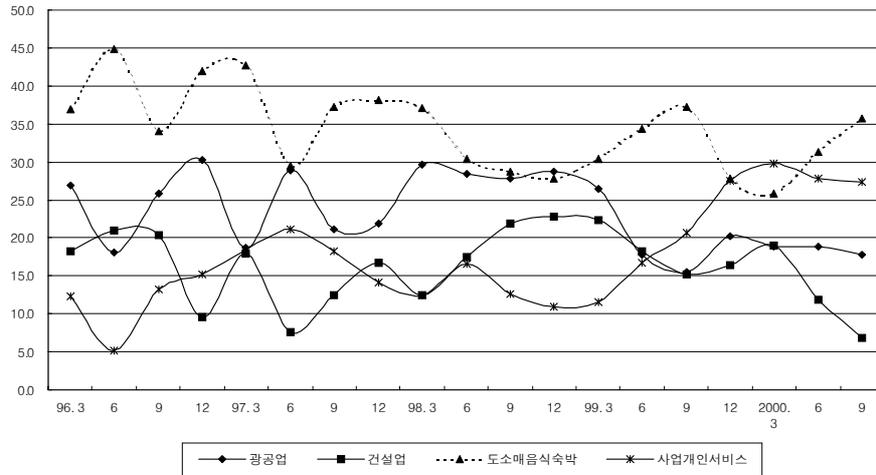
### 3) 전 직장의 산업

전직 실업자가 종사하던 산업의 분포를 살펴보면, [그림 II-23]과 같이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 3월에서 1999년 3월까지의 1년여 동안 광공업(제조업)과 건설업에 종사하던 장기실업자의 비중이 증가한 점이 주목의 대상이다.<sup>10)</sup> 이는 외환위기의 충격을 제조업과 건설업이 가장 심하게 받았던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1999년 6월 이후부터는 사업 및 개인서비스업과 도소매, 음식·숙박업에 종사하였던 장기실업자의 비중이 증가하였다.(부표 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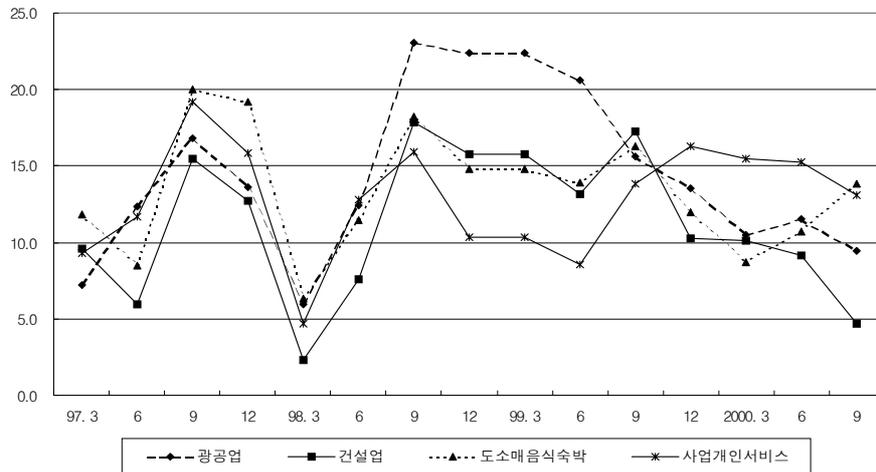
이러한 장기실업자 구성의 변화는 장기실업자가 될 위험성에도 영향을 미쳐 외환위기 직후부터 1999년 6월까지 [그림 II-24]와 같이 제조업(광공업)에 종사하던 실업자 중 장기실업자의 비중이 1998년 9월 23.1%, 12월 22.4%, 1999년 3월 22.4% 등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건설업 출신 실업자도 장기실업 상태에 놓인 비중이 다른 산업에 비해 다소 높았다(부표 8 참조). 그러나 1999년 12월부터는 사업 및 개인서비스업에 종사하던 실업자 중 장기실업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이는 향후 심층적 분석의 대상으로 판단된다.

[그림 II-23]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와 전직장의 산업

10) 여기에서는 산업은 '농림수산업', '광공업(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음식·숙박', '전기, 운수, 금융', 및 '사업 및 개인서비스'의 여섯으로 크게 구분하였으며, '농림수산업'은 그 비중이 매우 적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림 II-24] 실업자 중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의 비율: 전직장의 산업



#### 4) 전 직장의 직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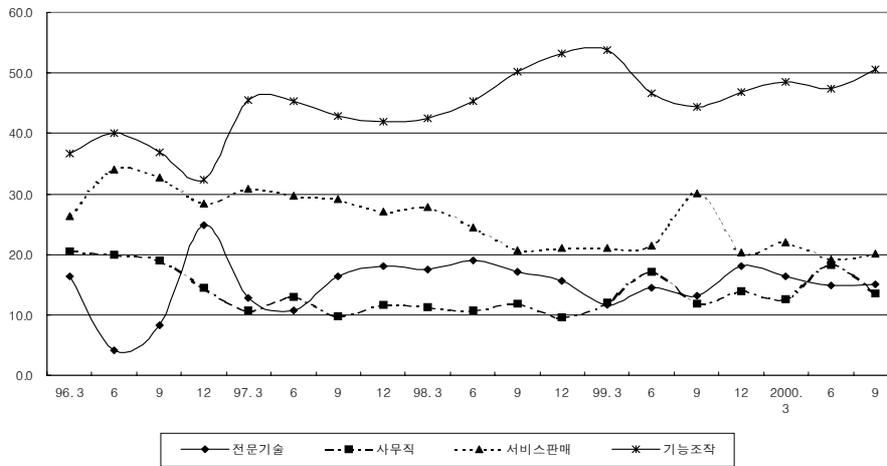
6개월에서 1년 미만의 장기실업자에서 기능, 기계조작 또는 단순근로로 종사하던 장기실업자의 비중이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높아져 1999년 3월의 경우 전체 장기실업자의 53.8%를 차지하였었다.<sup>11)</sup> 이는 산업의 경우와 비슷하게 기능직 및 기계조립·조작직이 주로 종사하고 있는 제조업이 외환위기의 타격을 가장 크게 입었던 점과 단순근로 등 저기능·저학력 계층을 중심으로 고용조정이 이루어졌던 점을 반영하고 있다(그림 II-25와 부표 4 참조). 반면, 서비스판매직에 종사하였던 장기실업자의 비중은 1996년 이후 하락추세를 보여, 이들 직종에서의 노동수요가 상대적으로 풍부함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이처럼 외환위기의 여파로 장기실업자 중 기능조작직의 비중이 증가하였으나, 장기실업에 놓일 위험성은 전문기술직과 사무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II-26]과 <부표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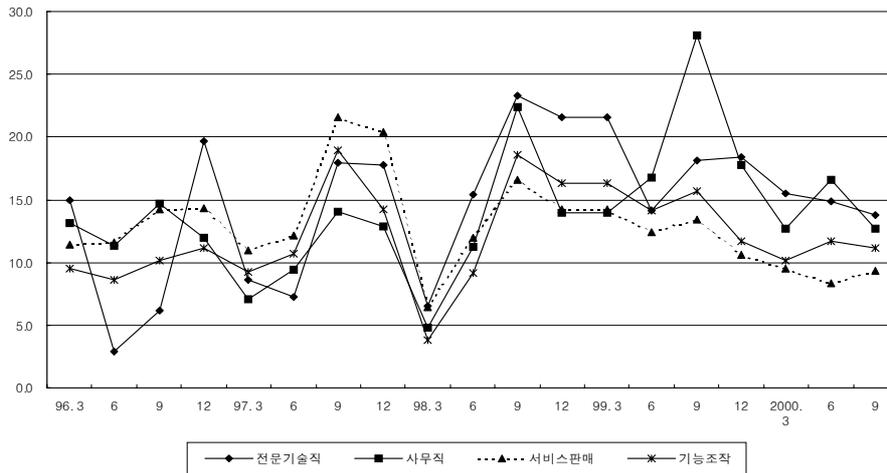
11) 전 직장의 직종은 ‘전문기술직(관리직, 전문직 및 준전문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농림수산업 관련직’, ‘기능조작(기능직, 기계조작 및 조립직, 단순근로)’의 다섯으로 크게 구분하였다. 산업과 마찬가지로 ‘농림수산업 관련직’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에서 외환위기 이후 전문기술직에 종사하던 실업자 중 6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자 비중은 1998년 9월의 경우 23.3%로 사무직의 22.4%, 서비스판매직의 16.6% 및 기능조작직의 18.6%와 대비된다. 이처럼 전문기술직으로 장기실업에 빠진 실업자의 비중이 높은 현상은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2000년 9월의 경우 그 비중이 13.8%로 사무직의 12.7%, 서비스판매직의 9.4%, 기능조작직의 11.2% 보다 높다. 전문기술직 실업자에서 장기실업의 위험이 높은 이유로 전직장의 소득수준이 높아 의존임금이 높으며, 직종의 전환에 따른 임금상실의 폭이 큰 점을 들 수 있다.

[그림 II-25]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와 전직장의 직업



[그림 II-26] 실업자 중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의 비율: 전직장의 직업



경제활동인구조사의 1993년 12월에서 2000년 9월까지의 원자료를 분석하여 장기실업자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외환위기를 전후로 장기실업자의 구조에 커다란 변화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구조변화는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의 구성비 변화와 실업자의 특성별로 장기실업자가 될 비율(위험성)의 변화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

먼저 장기실업자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외환위기 이전의 1993년 12월에서 1997년 12월까지

의 4년 동안에는 남성이며,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로 20대의 젊은 연령층이고, 가구주의 미혼자녀인 장기실업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고용사정이 좋았던 이 시기에는 기본적인 생계를 부모, 친지가 책임지는 계층에서 장기실업자가 많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외환위기로 인한 실업대란과 심각한 구직난이 발생하자 장기실업자의 특성도 변화하였다. 즉 장기실업자에서 남성의 비중이 70~80%에 달하는 것은 전과 동일하지만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의 저학력층에서, 연령대별로는 30대 이상에서, 그리고 가구주 또는 배우자인 장기실업자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장기실업자 중에서 가계를 책임지는 계층의 비중이 증가한 것은 실업의 장기화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가구가 다수 발생할 위험성을 시사한다.<sup>12)</sup>

직장경험이 있는 전직 실업자를 대상으로 전직의 특성에 따른 장기실업자 비중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먼저 외환위기로 인해 비자발적 실직자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전직의 종사상 지위에 따라서는 임시·일용직 장기실업자의 비중이 증가하였고, 산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 종사자들이, 그리고 직종별로는 기능조작(기능직, 기계조작 및 조립, 단순근로)에서 장기실업자가 많이 증가하였다.

두 번째로 어떤 계층에서 장기실업자의 비중이 많은지, 즉 어떤 계층에서 장기실업에 빠질 위험성이 높은지에 대해서는 먼저 남성이 여성보다 장기실업의 위험성이 높으며, 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장기실업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외환위기 전후 모두 발견되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외환위기 이전에는 뚜렷한 특징을 찾아볼 수 없었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40·50대의 중·장년층에서 장기실업 상태에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주와의 관계는 외환위기 이전에는 미혼자녀가 장기실업에 있을 위험이 많았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가구주의 위험성이 높았다.

또한 외환위기 이전에는 자발적 실업자가 장기실업에 빠질 위험성이 높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비자발적 실업자에서 장기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전 직장의 종사상 지위에 따라서는 외환위기 이전 자영업 실업자에서 장기실업이 많았으나 외환위기의 과정에서는 상용직 실업자 중 장기실업자의 비중이 높았던 현상이 나타났고, 산업별로는 외환위기 직후부터 1999년 6월까지 제조업(광공업)에 종사하던 실업자 중 장기실업자의 비중이 높았다. 또한 직업별로 장기실업에 놓일 위험성은 전문기술직과 사무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1999년 중반 이후 외환위기로 인한 변화된 장기실업자의 구조에도 새로운 변화가 발생하여 점차 실업자 특성별 차이가 완화되거나 모호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변화가 노동시장이 외환위기의 충격을 극복하여 외환위기 이전의 상태로 회귀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 변화를 반영하는지의 여부는 보다 깊은 분석과 자료를 요구한다.

12) 이점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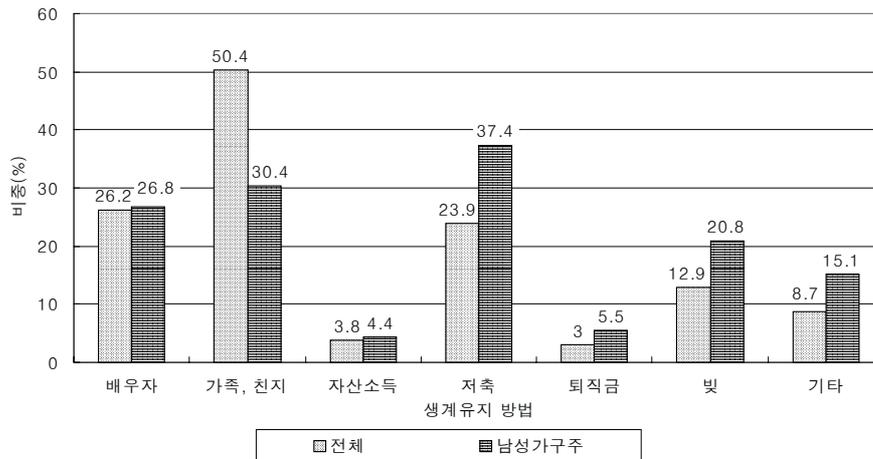
### Ⅲ. 장기실업자의 생활

#### 1. 장기실업자의 경제 상황

##### 가. 생계유지방법

1998년 제1차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는 구직기간 동안 어떤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가를 실업자에게 질문하였다.<sup>13)</sup> <표 Ⅲ-1>에서 보면 ‘가족 및 친지 보조’가 50.4%로 가장 많고, ‘배우자 소득’이 26.2%, ‘저축’ 23.9%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빚’으로 생활한다는 응답이 12.9%로 상당수를 차지하

[그림 Ⅲ-1] 실업자의 생계유지 방법: 전체 및 남성가구주



13) 생계유지방법은 1998년도에만 질문하여 1999년 이후의 변화를 알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또한, 질문형태도 ‘가장 중요한 것을 두 가지 이내로 골라주십시오’라고 하여 복수응답을 허용하였다.

고 있는 반면 ‘퇴직금’이나 집세, 이자 등 ‘자산소득’으로 생활한다는 응답자는 소수인 3.0%와 3.8%에 각각 머무르고 있다. 실업급여로 생활한다는 응답자는 24명으로 1.9%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금재호(1997)와 매우 유사하며, 실업자의 생계유지가 사회적 보호나 지원이 아닌 개인적 책임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분석대상을 남성가구주로 제한하였을 경우에는 <표 III-2>와 같이 ‘저축’의 비중 37.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가족 및 친지 보조’(30.4%), ‘배우자 소득’(26.8%), ‘빚’(20.8%)의 순으로 나타나 실업자가 생계를 의존하는 의존도가 변화한다. [그림 III-1]에서 보면 전체 구성원에 비해 남성이구는 ‘가족 및 친지 보조’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생계의존도가 높다. 특히, ‘저축’, ‘빚’, ‘퇴직금’에 대한 남성이구의 생계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성별로는 여성의 40% 정도가 ‘배우자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여 일반적 상식과 일치하고 있지만, 남성의 16.3%, 특히 남성 가구주의 26.8%가 배우자 소득으로 생계를 지탱하고 있다고 하여 부가노동자 효과(Added Worker’s Effect)가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40대 남성 가구주의 39.8%가 생계를 ‘배우자 소득’에 의존하고 있어 실업가구내 주부의 경제적 역할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실업시 생계유지를 위해 ‘저축’과 ‘자산소득’에 의존하는 비중이 증대하여 가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어, 나이가 많은 실업자들의 유동성 제약이 젊은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심각함을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20대에서 ‘저축’으로 생계를 유지한다는 실업자의 비중은 17.2%에 불과한 반면, 30대 27.1%, 40대 31.6%로 증가하고 있으며, ‘자산소득’으로 생계를 지탱한다는 응답자도 40대 이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남성이구의 경우에는 ‘저축’에 의존하는 비중이 37.4%에 달하여 전체 응답자의 23.9%보다 훨씬 높으며 연령대별로도 30대 이후에서 3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이는 남성이구의 거의 모두가 취업경험을 지니고 있으며, 전 직장에서의 받던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실업이 되더라도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력이 있었다는 점을 반영한다.<sup>14)</sup>

‘배우자 소득’에 생계를 의존하는 비율은 [그림 III-2]와 같이 40대까지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이후 하락하는 역U자 형태를 보이는 반면 ‘가족 및 친지 보조’는 역으로 40대까지는 감소하다가 이후 다시 증가하는 U자 형태를 보이고 있어 ‘배우자 소득’과 ‘가족 및 친지 보조’가 상호 대체적 관계임을 알 수 있다. 즉 취업경력이 적은 10~20대에는 부모나 형제의 지원에 생계를 의존하다가 취업경험과 경제력이 어느 정도 축적된 30·40대에서는 ‘배우자 소득’이나 ‘저축’에 의존하며, 다시 은퇴기인 50·60대 이후에서는 생계를 자식의 지원이나 ‘저축’에 의존하는 형태가 일반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표 III-1> 실업자의 생계유지방법: 전체

(단위 : %, 명)

14) 전체 실업자의 85.0%가 취업경험이 있었던 반면, 남성이구는 99.5%가 취업경험이 있었고, 전직장의 소득도 실업자 전체가 평균 90만 4천원이었으나 남성이구는 124만 1천원으로 37.3%가 많다.

분 류	배우자	가족·친지	자산소득	저축	퇴직금	빚
전 체(1,257)	26.2	50.4	3.8	23.9	3.0	12.9
성 별						
여 성(580)	37.8	46.6	3.3	21.4	1.9	11.4
남 성(677)	16.3	53.8	4.3	26.1	4.0	14.2
연령별						
10대(116)	2.6	92.2	1.7	6.9	0.0	4.3
20대(401)	11.7	72.3	3.7	17.2	1.8	9.5
30대(258)	44.2	30.2	2.3	27.1	4.3	14.0
40대(231)	48.1	15.6	4.8	31.6	3.5	19.1
50대(176)	23.9	46.6	5.7	33.5	5.1	19.3
60대(75)	16.0	54.7	5.3	29.3	4.0	6.7
학력별						
초등학교 이하(218)	24.3	44.5	2.8	28.4	2.8	17.9
중학교 졸업(219)	39.7	40.2	3.2	26.5	1.8	14.6
고등학교 졸업(511)	29.8	45.4	3.7	24.1	4.1	12.3
전문대 졸업(199)	7.5	77.9	4.5	14.1	2.0	9.1
대학졸 이상(110)	20.0	56.4	6.4	27.3	2.7	9.1
구직기간						
6개월 미만(684)	12.1	52.9	4.1	25.4	4.0	9.8
6개월~1년 미만(302)	24.8	49.3	3.3	25.2	2.3	18.5
1년 이상(245)	35.1	46.1	3.7	18.4	1.2	15.1

주 : 1) 복수응답이 가능하도록 함.

2) ( )안은 해당되는 응답자 수.

학력에 따라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생계를 ‘가족 및 친지 보조’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아가고 있다. 이는 고학력자의 가족 및 친지가 이들에게 생계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기 때문이지만, 고학력자가 상대적으로 젊은 점도 하나의 원인으로 판단된다. 특히 전문대졸 실업자의 경우 ‘가족 및 친지 보조’에 대한 의존도가 77.9%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 계층의 절반 가까이 4년제 대학의 재학생이거나 휴학생이며 연령대별로도 20대가 65.1%를 점유하여 부모나 형제가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보장하여 주는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 기댈 수 있는 부모나 가족이 없는 고졸 이하의 저학력층에서는 ‘저축’과 ‘빚’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구직기간별로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의 경우 ‘배우자 소득’에 대한 생계 의존도가 높게 조사되었다. 구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실업자는 12.1%만이 생계를 ‘배우자 소득’에 의존하고 있었으나, 구직기간 6개월~1년 미만에서는 의존도가 24.8%로 높아지고 있으며, 1년 이상의 장기실업자의 경우에는 1/3정도인 35.1%가 생계를 배우자에게 의존하고 있었다. 분석대상을 남성 가구주로 제한하였을 때에도 비슷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실업의 장기화에 따라 ‘빚’에 대한 의존도도 높아지고 있었다. 즉 6개월 미만의 실업자는 9.8%만이 ‘빚’으로 생활하고 있었으나 6개월에서 1년 미만의 실업자는 18.5%가, 그리고 1년 이상 실업자는 15.1%가 생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빚’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두 가지의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실업의 장기화에 따라 ‘빚’의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사실은 실업 초기에는 ‘저축’이나 ‘가족 및 친지 보조’, ‘퇴직금’ 등으로 생계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다가 이러한 자금이 고갈되면서 ‘빚’이 점차 늘어나게 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는 장기실업자의 빈곤문제가 상당한 규모로 존재할 가능성과 함께, 실업의 결과 빈곤상태에 빠질 위험도가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sup>15)</sup> 둘째, 장기실업자의 ‘배우자 소득’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실업의 장기화에 따라 부가노동자효과가 발생할 가능성과 더불어 배우자 취업이 거꾸로 의존임금을 높여 구직기간을 연장하고 결과적으로 실업의 장기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 <표 III-2> 실업자의 생계유지방법: 남성 가구주

(단위 : 명, %)

15) 실업자가 ‘빚’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어느 정도의 자산이나 다른 경제적 능력을 이들이 보유하고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로 ‘빚’으로 생활한다는 것이 곧 실업자의 빈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생계를 위해 ‘빚’을 얻어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곳에서 생계비를 충당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취업이 어려울 경우 곧장 빈곤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다. 또한 1998년 당시 금융시장이 매우 경직되어 취업자도 정상적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감안할 때, 이들 ‘빚’의 대부분은 가족, 친지 또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빌린 개인적 빚일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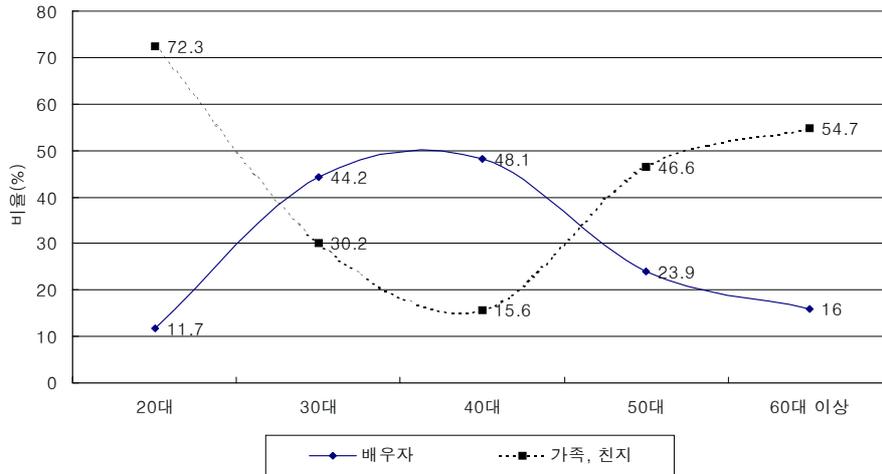
분 류	배우자	가족·친지	자산소득	저축	퇴직금	빚
전 체(385)	26.8	30.4	4.4	37.4	5.5	20.8
연령별						
20대(28)	14.3	28.6	0.0	53.6	3.6	21.4
30대(86)	24.4	29.1	2.3	37.2	7.0	24.4
40대(113)	39.8	13.3	3.5	34.5	5.3	24.8
50대(110)	20.9	41.8	6.4	39.1	4.6	20.9
60대(48)	20.8	47.9	8.3	31.3	6.3	4.2
학력별						
초등학교 이하(94)	20.2	38.3	4.3	30.9	2.1	20.2
중학교 졸업(84)	38.1	29.8	3.6	40.5	3.6	19.1
고등학교 졸업(150)	28.7	23.3	4.0	40.0	8.7	20.7
전문대 졸업(17)	11.8	41.2	0.0	29.4	5.9	29.4
대학졸 이상(40)	17.5	35.0	10.0	40.0	5.0	22.5
구직기간						
6개월 미만(181)	22.1	32.0	3.9	44.2	7.7	16.6
6개월~1년 미만(124)	30.7	29.8	4.0	33.1	3.2	26.6
1년 이상(70)	32.9	25.7	7.1	30.0	2.9	21.4

주: 1) 복수응답이 가능하도록 함.

2) ( )안은 해당되는 응답자 수.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특징의 하나는 ‘빚’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특히 남성 가구주의 경우 ‘빚’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 20.8%에 달하고 있다. 생계를 ‘빚’에 의존하는 비율은 20대 9.5%, 30대 14.0%, 40대 19.1%, 50대 19.3%로 연령에 따라 동반 상승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연령대별 분포는 30대 이후가 신용이나 담보능력의 측면에서 30대 이전보다 능력이 있다는 일반적 사실을 반영한다. 그러나 생계를 ‘빚’에 의존하고 있는 실업자 비중이 40·50대에서 20%수준에 근접한다는 점은 외환위기가 실업자에게가져온 충격의 정도를 간접적으로 대변하고 있다. 또한 학력별로는 학력이 낮을수록, 구직기간에 따라서는 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일 때, 그리고 가구주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가구주 본인이거나 배우자일 때 ‘빚’에 의존하는 실업자의 비중이 높다는 점은 이들 실업자들에게 생계유지는 현실적으로 매우 절박한 문제였으며, 실업에 의한 빈곤의 문제가 외환위기로 인해 심화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림 III-2] 연령대별 생계유지 방법: ‘배우자 소득’과 ‘가족 및 친지 보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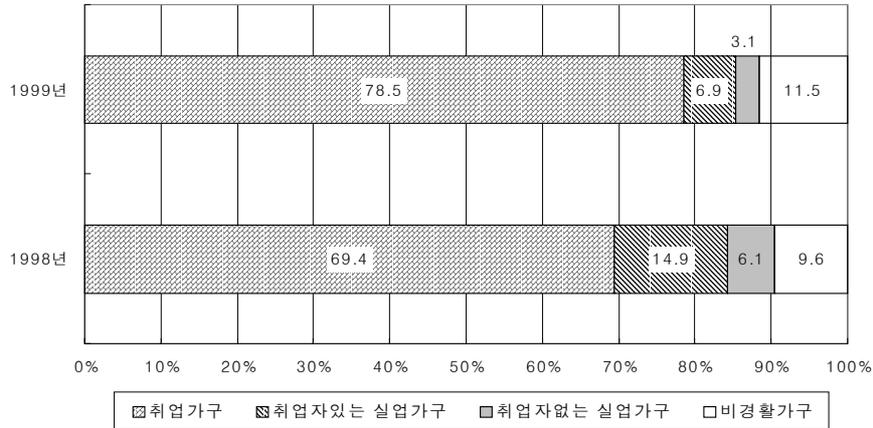


### 나. 장기실업가구의 경제 상황

1998년도 제1차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전체 5,005가구 중 실업자가 없으며 취업자가 한 명 이상 있는 취업가구는 69.4%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업자가 있는 실업가구는 1,050가구로 전체 응답가구의 21.0%에 달하였다.<sup>16)</sup> 그러나 [그림 III-3]과 같이 실업가구 중 71.0%(746가구)는 다른 가구원이 취업하고 있어 근로소득이 있으며, 304가구만이 가구내 취업자가 없는 순수 실업가구로 분류된다. 또한 취업자도 실업자도 없이 모든 가구원이 비경제활동상태에 놓여 있는 비경활가구가 481(9.6%)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비경활가구의 대부분은 가구주가 60세 이상 고령자인 노인가구로 분류되며, 가구원수도 2.06명으로 다른 가구에 비해 가구원수가 적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sup>17)</sup>

[그림 III-3] 고용상태별 가구구성비: 1998년과 1999년

- 16) 실업에 따른 가구 소득 및 지출의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실업 전의 가구 경제상태를 기준으로 실업이라는 사건발생 및 실업기간의 장기화에 따라 가구경제가 어떻게 변화하여 가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1998년 조사 당시에는 취업자였던 근로자가 1999년도 조사시점에는 실업자가 된 가구의 소득, 지출, 저축, 빚 등 경제상태의 변화를 추적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한국노동패널조사는 가구의 소득을 연평균 개념으로 질문하고 있어 실업에 따른 소득의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다. 또한, 해당되는 표본수가 100여 가구를 약간 초과하고 있어 분석결과와 통계적 유의성이 문제시 된다. 더욱이 조사시점 당시의 저축, 빚, 생활비 지출 등의 경제상태를 질문하고 있어 실업의 발생 및 장기화에 따른 가계의 경제적 대응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어렵다. 1999년도 조사에서는 소득, 저축 및 생활비 지출에 대해 지난 한해(1998년) 동안의 한달 평균치를 질문하여 조사시점의 기준이 변화한 문제가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1998년과 1999년의 2개년도에 대해 실업가구와 비실업가구간 경제적 격차 분석에 초점을 맞추도록 한다.
- 17) 비경활가구의 63.2%는 가구주 연령이 60세 이상이며, 50대가 12.7%, 40대가 10.2%를 차지한다. 또한, 응답가구의 평균 가구원수는 1998년에 3.50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구의 형태별 가구원수는 취업자가 있는 실업가구가 4.17명으로 가장 많으며, 취업가구가 3.59명, 그리고 취업자가 없는 순수 실업가구가 3.10명으로 조사되었다. 1999년도 조사에서도 취업자가 없는 실업가구의 가구원수는 3.28명으로 비경활가구의 2.41명에 비해서는 많으나 취업가구의 3.71명, 취업자가 있는 실업가구의 4.29명에 비해서는 낮다.



1998년도 조사에서 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실업자가 있는 가구는 495가구로 전체 실업가구 1,050가구의 47.1%에 해당하고 있다. 6개월 이상의 실업자가 있는 가구 중에서 취업자가 있는 실업가구는 70.5%로 나타나고 있으며, 단지 29.5%의 가구만이 취업자가 없는 순수실업가구로 조사되었다. 또한 구직기간이 1년 이상인 실업자가 있는 가구는 전체 실업가구의 21.6%이었다.

1999년에 들어서는 경기회복을 반영하여 실업가구의 비중이 10.0%로 크게 하락한 반면 취업가구의 비중은 1998년의 69.4%에서 78.5%로 증가하였다.<sup>18)</sup> 이에 함께 실업가구 중 6개월 이상 실업자가 있는 가구의 비중도 1998년보다 낮은 42.6%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1년 이상 장기 실업자가 있는 가구의 비중은 23.8%로 전년보다 다소 높아졌다.

### 1) 가구의 소득

1998년도 실업가구의 총소득은 월평균 139만 5천원으로 실업자가 없는 취업가구 171만 1천원의 81.5% 수준으로 나타났다.<sup>19)</sup> 이에 대해 취업자도 실업자도 없는 비경활가구의 월평균 총

18) 제2차 한국노동패널조사는 7월에서 11월까지 수행되었다. 이 기간은 외환위기의 고비를 넘기면서 경기회복이 가속화되기 시작한 시기로 계절조정실업률도 1999년 1/4분기의 7.6%에서 2/4분기 6.7%, 3/4분기 5.9%로 급격히 낮아진 시기이다. 이러한 경기회복을 반영하여 실업가구수도 1998년도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19)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제1차년도와 제2차년도 사이에 조사기준의 변화가 있었다. 1998년도에는 조사일을 기준으로 지난 1년 동안의 월평균 근로소득을 질문하였고, 1999년도에는 지난 한해(1998년) 동안 얻은 월평균 근로소득을 질문하였다. 이에 따라, 1999년도의 가구소득에 대해서는 해석상 주의를 필요로 한다. 즉, 실업상태의 여부는 1999년 조사시점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반면, 소득은 1998년 1년 동안의 소득을 조사하였다. 조사기준 시점의 변화로 인해 1998년 조사의 근로소득과 1999년도 조사의 근로소득이 시기적으로 중복된다. 1998년도 실업가구의 월평균 총소득 139만 5천원은 1999년도 조사 때 밝혀진 소득수준이다. 또한, 조사시점 당시에는 실업자라고 할지라도 조사대상 기간동안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1999년 조사시점 당시에는 실업자였으나 1998년에는 취업자인 경우와 거꾸로 조사시점에는 취업자였으나 1998년에는 미취업자였던 표본이 가구소득의 계산에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표본은 실업가구와 취업가구 사이의 소득격차를 실제보다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소득은 1998년 81만 4천원으로 가장 낮다. 비경활가구의 소득수준은 전체 가구 평균소득 157만 6천원의 절반 정도인 51.6%에 불과하며, 실업가구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동일한 실업가구라고 할지라도 다른 가구원이 취업하고 있는지에 따라 실업가구의 소득은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98년의 조사 당시 취업자가 없는 순수 실업가구의 월평균 총소득은 92만 9천원으로 취업자가 있는 실업가구 156만 7천원의 59.3%에 그치고 있다. 1999년의 제2차 조사에서도 사정은 비슷하여 취업자가 있는 실업가구의 소득은 156만 2천원인데 대해 순수 실업가구의 소득은 102만 4천원으로 65.5%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표 III-3> 1998년도 조사시 실업가구의 경제상황: 소득, 생활비, 저축 및 부채

(단위 : 만원)

	실업가구				실업 가구 전체	취업 가구	비경활 가구	전체 가구
	취업자 없음		취업자 있음					
	6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총소득(월)	48.9	135.1	135.4	175.3	138.6	166.0	53.1	149.4
근로소득	18.4	46.0	118.7	143.5	103.4	157.7	6.4	131.5
자산소득(금융, 부동산)	8.4	12.8	3.8	5.1	6.3	5.4	17.4	6.7
이전소득 및 기타소득	22.9	74.9	12.7	26.0	28.3	3.1	28.5	10.8
가구원 1인당 총소득	17.5	50.0	34.0	42.6	37.3	50.9	27.0	45.7
생활비	76.6	81.6	103.5	104.0	96.7	109.4	51.4	101.2
가구원 1인당 생활비	25.8	29.3	25.9	25.5	26.2	32.9	26.4	30.9
저축	3.5	11.5	20.7	26.6	19.2	41.8	5.6	33.5
부채(빚)	596.3	898.7	1,300.0	1,030.9	1,040.4	1,294.7	488.6	1,163.8

주: '비경활가구'는 모든 가구원이 비경제활동인구로 실업자도 취업자도 없는 가구임.

그러나, 가구원수를 감안한 가구원 1인당 소득을 살펴보면 취업자가 있는 실업가구와 순수 실업가구와의 소득격차가 크게 줄어드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취업자가 있는 1998년의 경우 실업가구의 1인당 소득은 38만 6천원이나 순수 실업가구의 1인당 소득은 34만 1천원으로 그 차이는 4만 5천원에 불과하다. 이러한 현상은 취업자 없는 실업가구와 비경활가구의 가구원수가 적은 반면, 취업자 있는 실업가구와 취업가구의 가구원수가 많은 것에 연유하며, 이러한 결과는 1999년도 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여지고 있다.<sup>20)</sup> 이에 대해 취업가구의 1인당 소득은 1998년 조사시 50만 9천원으로 실업가구에 비해 크게 높다. 따라서, 1인당 소득을 기준으로 실업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살펴보았을 때, 실업가구는 다른 가구원의 취업여부와 상관없이 취업가구에 비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으며, 빈곤의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표 III-4> 1999년도 조사시 실업가구의 경제상황: 소득, 생활비, 저축 및 부채

(단위 : 만원)

20) 취업자의 유무에 따른 실업가구 1인당 소득격차에 대한 통계적 검증결과는 10% 수준에서 실패하였다.

	실업가구				실업 가구 전체	취업 가구	비경활 가구	전체 가구
	취업자 없음		취업자 있음					
	6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총소득(월)	82.5	118.3	141.5	166.9	139.5	171.1	81.4	157.6
근로소득	39.1	65.9	122.5	128.5	103.7	149.9	34.0	132.0
자산소득(금융, 부동산)	8.1	11.1	9.4	18.5	13.2	8.7	14.8	9.8
이전소득 및 기타소득	35.3	40.6	9.6	19.8	22.6	12.5	32.3	15.8
가구원 1인당 총소득	23.9	37.2	33.3	38.9	34.9	49.5	33.9	46.2
생활비	67.2	73.4	99.1	104.3	92.4	107.2	71.8	101.7
가구원 1인당 생활비	20.1	23.3	23.7	24.9	23.6	31.1	31.2	30.3
저축	3.7	5.2	18.2	15.6	12.9	28.7	6.2	24.6
부채(빚)	1,501.7	1,202.8	1,884.9	1,490.8	1,556.0	1,964.2	1,076.2	1,821.0

주: '비경활가구'는 모든 가구원이 비경제활동인구로 실업자도 취업자도 없는 가구임.

또한 비경활가구의 경우에도 1인당 소득이 1998년의 경우 30만원 정도에 불과하여 빈곤의 위험도가 높다. 이들 가구원의 상당수는 적절한 기회만 주어진다면 취업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노동시장의 상황변화에 따라 경제활동에 참가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인력의 규모는 실업률로 판단되는 숫자보다 훨씬 많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측면에서 실망실업가구로서 비경활가구의 성격을 파악하려는 노력과 함께 고용정책의 대상범위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실업기간의 장기화에 따라 가구의 경제상태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가구내 다른 취업자가 없는 순수실업가구의 경우 더욱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실증 결과는 이를 입증하고 있다. <표 III-3>에서 보면 6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자가 있는 가구 경제상태가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여겨진다. 취업자가 없는 순수실업가구로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가구의 총소득은 월평균 48만 9천원에 지나지 않아 절대빈곤의 상태에 놓여있다.<sup>21)</sup> 이들 가구의 가구원 1인당 총소득도 17만 5천원으로 다른 실업가구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취업자가 있는 실업가구는 가구원 중 6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자가 있더라도 가구의 총소득이 월평균 135만 4천원에 달하며, 1인당 총소득도 34만원으로 기본적인 생계유지가 가능한 정도의 소득을 얻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장기실업자군내에서도 다른 가구원의 취업여부에 따라 상당한 규모의 소득격차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입증한다.

실업가구에 대한 일반적 추론의 하나는 가구주가 장기실업상태에 놓여있을 때, 빈곤의 위험성이 훨씬 높아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1998년도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1,050의 실업가구 중 가구주가 취업하고 있었던, 즉 실업자가 가장이 아닌 다른 가구원인 경우가 47.3%인 반면, 가구주가 실업상태였던 가구는 43.0%로 나타났다. 나머지 9.7%의 실업가구는 가구주가 비경제활동 상태이었다.

<표 III-5> 1998년도 조사시 가구주 경제활동상태와 실업가구의 경제: 소득, 생활비, 저축 및 부채  
(단위 : 만원)

21) 해당되는 가구의 수는 1998년 143가구로 전체가구의 2.9%를 차지하였다.

	가구주실업 가구			가구주 취업 실업가구	가구주 비경활 실업가구	전체 실업가구
	6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전 체			
총소득(월)	83.0	163.7	123.2	162.6	94.5	139.1
근로소득	53.2	76.7	65.0	148.6	58.4	103.8
자산소득(금융, 부동산)	6.1	8.3	7.2	3.4	14.4	6.1
이전소득 및 기타소득	23.7	77.8	50.9	9.8	20.6	28.5
가구원 1인당 총소득	24.1	52.8	38.5	39.6	22.3	37.5
생활비	86.9	87.1	87.0	107.1	91.2	97.0
저축	5.9	16.2	11.2	27.6	15.1	19.3
부채(빚)	856.7	745.3	800.5	1,258.8	1,101.6	1,048.0

주: '비경활가구'는 모든 가구원이 비경제활동인구로 실업자도 취업자도 없는 가구임.

이들 가구주 실업가구의 경제적 상황은 <표 III-5>에 나타나 있는데, 소득, 생활비, 저축 등의 대부분 분야에서 가구주실업 가구의 경제상태가 가구주취업 실업가구보다 나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22)</sup> 특히 가구주가 6개월 이상 장기실업상태에 놓여있을 때, 가계는 더욱 악화되어 가구원 1인당 총소득이 24만 1천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가구주의 장기실업이 빈곤을 가져올 것이라는 예상을 증명한다. 가구주가 비경제활동상태에 있는 실업가구의 가구원 1인당 소득이 22만 3천원에 불과하다는 점도 주목의 대상이다. 이들 가구도 가구주 장기실업가구와 마찬가지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사회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가구로 여겨진다.

## 2) 가구의 소비 및 부채

소득과 마찬가지로 실업가구의 생활비는 취업가구보다 낮게 조사되었다.<sup>23)</sup> 1998년의 경우 전체 실업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는 96만 7천원으로 가구소득 138만 6천원의 69.8% 수준이다.<sup>24)</sup> 이에 대해 취업가구의 생활비는 109만 4천원으로 실업가구와 취업가구의 생활비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러나 <표 III-3>과 같이 가구원수를 고려한 1인당 생활비는 취업가구가 32만 9천원인 반면, 실업가구는 26만 2천원으로 실업가구의 1인당 생활비가 상대적으로 낮다.<sup>25)</sup> 가구소득 대비 생활비의 비중도 취업가구가 65.9%인 반면, 실업가구는 69.8%로 별다른 차이가 없으나 순수 실업가구는 그 비중이 85.3%로 소득의 대부분을 생활비로 지출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1999년도 조사에서도 발견되고 있으며, 실업가구, 특히 취업자가 없는 실업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sup>26)</sup>

22) 1999년도의 경우에는 표본수의 제약으로 인해 분석결과를 보고하지 않았다.

23) 여기에서 가구의 생활비는 '교육비, 주거비, 식품비, 보건의료비, 교통통신비, 각종공과금, 자동차등의 물품 할부대금 등 생활하는데 드는 돈'으로 정의되고 있다.

24) 생활비 및 저축액에 대해서도 1999년의 제2차 조사시 조사의 대상시점이 변화한 것에 주목하여야 한다. 1998년도 제1차 조사 때에는 조사시점 당시의 한 달 평균 저축액과 한 달 평균 생활비를 질문하였으나, 1999년의 제2차 조사에서는 지난 한 해(1998년) 동안의 월평균 저축액과 생활비를 질문하였다.

25) 이러한 현상은 1999년도 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발견되며, 실업가구와 취업가구의 생활비 차이는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하다.

26) 1999년의 제2차 조사에서는 식비, 외식비, 공교육비, 사교육비, 차량유지비, 주거비, 경조사비, 보건의료비,

실업기간과 관련되어서는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가 있는 순수실업가구의 소득은 낮으나 가구생활비는 1998년 조사시 월평균 76만 6천원으로 대부분의 가구들이 적자를 보고 있었다.<sup>27)</sup> 가구원 1인을 기준으로 이들 가구는 월 17만 5천원의 소득을 올리는 반면, 지출액은 25만 8천원으로 1인당 8만 3천원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가계의 적자는 '빚'의 증가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1998년도 조사에서 이들 가구의 부채는 596만 3천원으로 다른 가구들에 비해 부채규모가 상당히 낮은 편이었다. 그러나 1999년도의 조사에서는 가구부채가 1,501만 7천원으로 151.8%가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증가폭은 실업가구 전체의 증가율 49.6%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6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자가 있는 순수실업가구가 심각한 경제위기에 처해 있는 반면, 같은 장기실업자도 가구 내에 취업자가 있으면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와 취업자가 함께 있는 가구의 총소득을 살펴보면 월평균 135만 4천원으로 기본적인 생계유지에는 별 다른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기실업자가 있는 가구는 다른 가구원의 취업유무와는 상관없이 소득이나 저축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가구의 소득이 낮기 때문에 미취업자가 장기간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지, 아니면 장기실업의 영향으로 가구의 소득과 저축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가구원 1인당 지출규모가 취업가구는 32만 9천원인 반면, 취업자 있는 6개월 장기실업자 가구는 월평균 25만 9천원으로 약 7만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가구소득의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장기간 구직활동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와 취업자가 함께 있는 가구의 빚이 1,300만원으로 다른 가구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도 주목의 대상이다. 이는 빚도 실업의 장기화에 기여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들 가구의 경우 다른 가구원이 취업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계유지는 걱정이 없으나, 낮아진 생활수준이나 또는 상대적으로 과도한 빚을 갚기 위해서 장기간 구직활동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기본적인 생계유지가 지탱되기 때문에 장기실업자는 자신의 의중임금이나 기대수준을 지나치게 낮추면서까지 취업을 갈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즉 자발적으로 장기간 실업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sup>28)</sup>

그러나, 취업자가 없는 순수실업가구의 장기실업자는 최소한의 생계도 지탱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직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들 장기실업자 가구는 실업기간이 늘어날수록 가구의 경제상황이 악화되어 빚이 늘어나고, 최소한의 소비생활도 영위하기 힘들기 때문에 적극적

문화비, 내구재 비용 등 11가지의 항목에 대해 세부적인 지출규모를 질문하였다. 거의 모든 항목에서 실업가구의 1인당 지출액은 취업가구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7) 이들 가구들도 월평균 3만 5천원 정도의 저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적자를 보는 가구의 경우 저축액이 0원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계산상의 착오이다. 즉, 거의 모든 가구들이 적자를 보더라도 소수의 가구들이 저축을 한다면 평균저축액은 정(+)의 값을 지니게 된다.

28) 순전히 가구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는 많지 않을 것이다. 근로는 인간의 존재 가치를 확인시켜주는 기능이 있고, 취업이 근로자에게 주는 심리적·사회적 자신감은 금액으로 나타내기 어렵다. 따라서 가구의 소득이나 소비수준과 상관없이 대부분의 실업자들은 취업을 희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가구의 소득과 소비가 근로자의 의중임금을 통해 실업기간의 장기화 여부에 끼치는 영향을 논의하고 있다.

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가구일 것이다. 이러한 점은 취업자가 있는 실업가구에 비해 순수실업가구에 속한 실업자의 구직활동 투입시간이 주당 9.44시간 대 13.13시간으로 더 많은 사실에서 간접적으로 입증된다.

### 3) 경제적 애로점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는 가구용 설문지의 응답자에게 ‘\_\_님 택은 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라고 질문하였다. 따라서 경제적 어려움의 여부가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거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지만, 전체 가구의 62.4%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으며, 실업자가 없는 취업가구도 절반 이상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하여 가구경제에 미친 외환위기의 영향이 상당히 광범위하였음을 시사한다. 1999년도 조사에서도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는 가구의 비율은 전년도에 비해 다소 하락하였으나 아직도 60%에 가까운 가구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6>과 <표 III-7> 참조) 그러나 생계유지의 가장 기본적 항목으로 볼 수 있는 ‘식비’ 또는 ‘주거비’에서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비중은 전년도보다 1999년 들어 증가하였다. 전반적인 어려움의 정도는 감소한 반면 ‘식비’ 또는 ‘주거비’의 어려움을 느끼는 가구 비중이 증가한 원인은 명확하지 않으나 가구소득의 불평등도 악화 및 가구 부채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론된다. 외환위기의 충격을 벗어나거나 피한 가구는 경기회복에 따라 가구의 경제상태가 개선되고 경제적 어려움에서도 탈피한 반면 장기실업가구 등 외환위기의 충격을 벗어나지 못한 가구는 장기간의 불황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sup>29)</sup> 또한, 부채의 증가에 따른 원리금 상환의 부담은 심리적이거나 실제적으로 ‘식비’나 ‘주거비’ 등 기초적인 생계비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실업가구의 대부분은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8년도 조사에서 실업가구의 81.6%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비중은 취업가구의 55.9%에 비해 25.7%포인트나 높은 값이다. 같은 실업가구도 가구 내에 취업자가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는 비율이 달라지고 있다. 1998년도 조사에서 취업자가 있는 실업가구는 77.1%가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고 있지만 취업자가 없는 순수 실업가구의 경우에는 10가구 중 9가구 이상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하였다.<sup>30)</sup>

6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자가 있을 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더욱 높다. <표 III-6>에서 가구 내 취업자의 여부와 상관없이 장기실업자가 있는 경우에 경제적 곤란을 느끼는 가구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순수 실업가구이면서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가 있는 가구의 95.2%가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여 장기 실업가구의 경제적 위기를 대변한다. 이러한 현상은 1999년도의 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발견되며, 실업의 장기화가

29) 이러한 점은 1998년도 조사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는 가구들이 세부적으로 1.6개의 항목에서 곤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1999년도에는 1.7개 항목에서 곤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한 점에서도 간접적으로 증명된다.

30) 취업자가 있는 실업가구와 순수 실업가구의 이러한 차이는 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의 구체적 내용으로 '식비'에 대해 1998년 전체 가구의 18.0%만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실업가구는 그 비중이 크게 증가하여 29.8%에 달하고 있다. 특히 취업자 없는 순수 실업가구와 이 중에서도 6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자 가구에서 식비조달이 어렵다는 응답자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이러한 비중은 취업가구의 12.2%만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결과와 대비된다.

실업가구, 특히 순수 실업가구와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가구의 상당수는 관리비, 월세 등 '주거비'의 지출에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98년의 경우 실업가구의 25.6%가 '주거비'의 곤란을 호소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비중은 순수 실업가구이고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가 있는 가구일수록 높아지고 있었다. 따라서, 취업자가 없으면서 6개월 장기실업자가 있는 가구의 대부분은 가장 기본적 생계유지 항목이라고 할 수 있는 '식비'와 '주거비'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가구의 경제적 위기가 심각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러한 상황은 1999년에 들어서 개선되지 않았다. 1999년의 경우 취업자가 없으면서 장기실업자가 있는 가구에서 '식비' 또는 '주거비'의 조달이 곤란한 가구 비중은 전년도보다 더욱 증가하였다. 이는 경제적 곤란 실업가구의 비중이 전년도에 비해 낮아진 사실과 대비되며, 경기회복이 장기실업자가 있는 순수 실업가구까지 그 효과를 미치고 있지 못하였음을 시사한다. '식비'와 '주거비'를 제외한 '교육비', '채무의 원리금 상환', '의료비' 등에서는 실업가구의 형태에 따라 어려움을 느끼는 가구의 비중 변화가 그렇게 뚜렷하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많은 가구들이 '교육비'와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교육비'의 충당에 어려움이 있다는 가구의 비중은 1998년도에 25.5%, 1999년도에는 22.5%로 나타났다. 1999년도의 경우 '교육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교육비 지출은 공교육비 18만 5천원, 사교육비 11만 8천원으로 월평균 30만 3천원에 달하고 있는 반면 총소득은 월 149만원 수준으로 소득의 20.3%를 교육비에 지출하고 있었다.<sup>31)</sup>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이 있다는 가구의 비중은 1998년도 22.6%, 1999년도 24.2%로 1년 동안 그 비중이 다소 증가하였다. 이처럼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비중이 증가한 것은 가구의 채무규모가 1년 사이 56.4%가 증가한 점에 기인한다.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가구의 채무규모는 1999년의 경우 4,527만 5천원으로 어려움이 없는 가구의 958만 4천에 비해 4.7배나 많다.<sup>32)</sup>

<표 III-6>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비율: 1998년도

(단위 : %)

31) 이에 대해 '교육비'의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가구는 공교육비 6만 3천원, 사교육비 7만 4천원 등 13만 7천원을 매달 교육에 투자하고 있는 반면, 가구 총소득은 월 160만 2천원으로 교육비의 비중이 8.5%에 불과하다.

32) 1998년에도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가구의 채무규모는 3,696만 6천원으로 어려움이 없는 가구의 434만원에 비해 8.5배나 많았다.

	실업가구					취업 가구	미취업 가구	전체 가구
	취업자 없음		취업자 있음		실업가 구전체			
	6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 식비(식료품비)	52.1	39.9	28.1	19.1	29.8	12.2	34.3	18.0
2. 교육비	36.3	34.8	34.1	36.5	35.4	23.4	13.3	25.0
3. 채무의 원리금상환	26.0	26.6	28.9	24.9	26.7	22.9	11.2	22.6
4. 의료비	26.0	21.5	12.9	9.6	14.8	9.2	31.4	12.5
5. 주거비(관리비, 월세)	38.4	40.5	24.5	16.1	25.6	13.3	19.8	16.5
경제적 곤란 가구	95.2	87.3	82.5	73.6	81.6	55.9	68.0	62.4

주: '경제적 곤란 가구'는 조사시점 당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율임.

<표 III-7>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비율: 1999년도

(단위 : %)

	실업가구					취업 가구	미취업 가구	전체 가구
	취업자 없음		취업자 있음		실업가 구전체			
	6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 식비(식료품비)	62.0	40.5	34.4	33.2	38.9	18.3	40.9	22.9
2. 교육비	29.0	31.7	35.1	31.5	32.2	23.3	8.5	22.5
3. 채무의 원리금상환	29.0	21.5	32.1	33.7	30.5	25.2	12.0	24.2
4. 의료비	16.1	21.5	13.0	14.4	15.5	9.8	29.9	12.7
5. 주거비(관리비, 월세)	41.9	27.9	17.6	18.2	23.0	14.3	22.5	16.1
경제적 곤란 가구	88.7	83.5	77.1	75.1	79.0	56.1	65.1	59.4

주: '경제적 곤란 가구'는 조사시점 당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율임.

## 2. 장기실업자의 생활만족도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는 ‘생활전반’, ‘가족의 수입’, ‘가족관계’, ‘여가활동’ 및 ‘주거환경’의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 개인의 만족도를 질문하였다. 질문의 형식은 ① 매우 만족스럽다, ② 만족스럽다, ③ 보통이다, ④ 불만족스럽다, ⑤ 매우 불만족스럽다의 다섯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 실업자들은 예상과 같이 모든 항목에서 불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8>에서 ‘생활전반’에 대한 실업자들의 불만족도는 5점 척도에서 3.52로 임금근로자의 3.01, 비임금근로자의 3.17 및 비경제활동인구의 3.17에 비해 상당히 높다. 이러한 실업자의 불만족은 ‘가족의 수입’, ‘가족관계’, ‘여가활동’ 및 ‘주거환경’에서도 마찬가지로 발견되며, 1998년과 1999년 모두 비슷한 결과를 찾아볼 수 있다.<sup>33)</sup>

<표 III-8> 개인의 특성과 불만족도: 1998년도

	생활전반	가족의 수입	가족관계	여가활동	주거환경
임금 근로자	3.01	3.35	2.22	3.22	2.91
비임금 근로자	3.17	3.63	2.23	3.34	2.94
실업자	3.52	3.93	2.42	3.43	3.17
비경제활동인구	3.17	3.52	2.34	3.19	2.91
전 체	3.15	3.53	2.28	3.27	2.95

주: 나타난 값은 ‘매우 만족스럽다’를 (1), ‘만족스럽다’를 (2), ‘보통이다’를 (3), ‘불만족스럽다’를 (4), ‘매우 불만족스럽다’를 (5)로 하는 5점 척도 값임.

<표 III-9> 개인의 특성과 불만족도: 1999년도

	생활전반	가족의 수입	가족관계	여가활동	주거환경
임금 근로자	2.99	3.33	2.28	3.29	2.87
비임금 근로자	3.12	3.54	2.26	3.34	2.86
실업자	3.50	3.87	2.47	3.32	3.06
비경제활동인구	3.05	3.35	2.36	3.16	2.82
전 체	3.06	3.41	2.32	3.25	2.86

주: 나타난 값은 ‘매우 만족스럽다’를 (1), ‘만족스럽다’를 (2), ‘보통이다’를 (3), ‘불만족스럽다’를 (4), ‘매우 불만족스럽다’를 (5)로 하는 5점 척도 값임.

33) 개인의 고용상태에 따른 불만족도의 차이는 거의 모든 경우에 대해 1~10%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실업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생활 및 가족관계에 대한 불만족도도 변화한다. 실업자가 가구주일 경우 생활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I-10>과 같이 1998년도 조사에서 가구주인 실업자의 생활 불만족도는 5점 척도 기준 3.78로 나타나 배우자의 3.48이나 자녀의 3.29에 비해 상당히 높다.<sup>34)</sup> 이러한 현상은 1999년에도 마찬가지로 생계를 책임지는 가구주라는 위치가 상당한 개인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족관계에 있어서도 배우자보다 가구주의 불만족도가 높게 조사되고 있다. 이는 가구주의 대부분이 남성이고 남성의 가족관계 불만족도가 여성보다 다소 높다는 점에 부분적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가구주의 실업이 가족관계에 긴장을 초래하였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sup>35)</sup>

또한 자발적 실업의 여부도 실업자의 생활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표 III-10>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실업자의 생활만족도가 5점 척도로 1998년에 3.43, 1999년 3.33인 반면,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실업자의 만족도는 1998년 3.74, 1999년 3.70으로 상당한 차이가 발견된다. 이러한 결과는 폐업, 도산, 정리해고, 명예퇴직 등의 타의에 의해 직장을 그만둔 실업자의 상당수가 심리적 불안이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구직활동기간에 따라서도 실업기간의 장기화에 따라 생활전반 및 가족관계에 대해 불만족을 호소하는 실업자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1998년의 경우 구직기간 6개월 미만인 실업자의 47.1%가 생활이 '불만족스럽다' 또는 '매우 불만족스럽다'라고 응답한 반면, 구직기간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실업자는 56.6%가 '불만족스럽다' 또는 '매우 불만족스럽다'라고 대답하였다. 구직기간의 장기화는 생활전반의 만족도뿐만 아니라 가족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진다. 1998년에 구직기간의 장기화에 따라 가족관계에 불만족 또는 매우 불만족을 느끼는 실업자 비율은 6개월 미만 7.9%에서, 6개월 이상 1년 미만 10.1%, 1년 이상 11.5%로 점증하고 있다. 비록 가족관계에 불만족을 느끼는 실업자의 비율이 높지는 않지만 실업의 장기화가 가족관계를 악화시키고 더 나아가 가족붕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명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실업기간의 장기화가 생활전반과 가족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1999년도의 조사에서도 발견되고 있으며, 장기실업자에 대한 심리적 상담과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 <표 III-10> 실업자의 특성과 불만족도

34) 가구주와의 관계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는 5% 수준에서 유의하다.

35) 성, 연령, 교육수준, 가구주 여부 등을 감안한 로짓분석의 결과도 가구주 여부가 생활만족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전반의 불만족도		가족관계의 불만족도	
	1998년	1999년	1998년	1999년
실업자 전체	3.52	3.50	2.43	2.47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	3.78	3.70	2.49	2.45
배우자	3.48	3.39	2.28	2.37
자녀	3.29	3.31	2.44	2.52
여타 가구원	3.61	3.64	2.63	2.50
자발적 이직 여부				
자발적 이직	3.43	3.33	2.48	2.37
비자발적 이직	3.74	3.70	2.45	2.52
구직활동기간				
6개월 미만	3.49	3.41	2.40	2.39
6개월~1년 미만	3.65	3.48	2.47	2.47
1년 이상	3.58	3.75	2.61	2.87

주: 나타난 값은 '매우 만족스럽다'를 (1), '만족스럽다'를 (2), '보통이다'를 (3), '불만족스럽다'를 (4), '매우 불만족스럽다'를 (5)로 하는 5점 척도 값임.

## IV. 장기실업자의 구직활동

### 1. 직장탐색

#### 가. 희망 직장의 성격

##### 1) 희망 직종

실업자가 취업을 희망하는 직종은 서비스·판매직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기능 및 기계조작·조립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문직 및 관리직을 희망하는 실업자 비중은 1998년 4.0%, 1999년 7.1%에 지나지 않는다. 연도별로 1998년과 1999년의 희망 직종의 분포 차이는 발견하기 어렵다.(표 IV-1 참조) 실업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전 직장과 희망 직장 사이의 직종분포는 <표 IV-2>에 나타나 있는데 기능 및 기계조작·조립직에서 전 직장의 직종과 동일한 직종의 취업을 희망하는 비율이 71.1%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전문직 및 관리직의 69.2%, 서비스·판매직

<표 IV-1> 실업자의 희망 직종

(단위 : %, 명)

	1998	1999
전문직 및 관리직	4.0( 43)	7.1( 34)
준전문직	8.8( 94)	11.3( 54)
사무직	12.9( 137)	14.4( 69)
서비스·판매직	30.0( 320)	23.4( 112)
농림어업직	0.8( 8)	0.8( 4)
기능 및 기계조작·조립직	23.7( 253)	25.7( 123)
단순근로	19.8( 211)	17.3( 83)
전 체	100.0(1,066)	100.0( 479)

주:( )안은 응답자수임.

의 66.5% 순서이다.<sup>36)</sup> 준전문직의 43.9%와 사무직의 50.4%만이 같은 직종의 취업을 희망하여 단 순근로의 55.3%보다도 낮게 조사되고 있다.

<표 IV-2> 실업자의 전 직종과 희망 직종

(단위 : %)

이전 직장의 직종	희망 직종						
	전문직	준전문직	사무직	서비스 · 판매	기능 및 기계조작	단순 근로	전체
전문직 및 관리직	69.2	11.5	0.0	3.9	11.5	3.9	100.0(26)
준전문직	5.3	43.9	14.0	18.4	6.1	11.4	100.0(114)
사무직	7.3	12.2	50.4	19.5	4.0	5.7	100.0(123)
서비스·판매직	1.9	8.5	7.3	66.5	5.8	9.2	100.0(260)
기능 및 기계조작·조립직	0.9	1.8	2.1	10.7	71.1	12.5	100.0(336)
단순근로	0.4	2.3	6.5	22.9	12.2	55.3	100.0(262)

주: 1)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제1차년도와 제2차년도 데이터를 통합하여 분석하였음. 또한 농업수산업 관련직은 표본수가 적어 제외하였음.

2) ( )안의 값은 해당되는 응답자수임.

실업자 전체적으로는 39.3%가 직종 전환을 희망하고 있었다. 실업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서는 <표 IV-3>과 같이 여성이고,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학력이 높은 경우에 재취업시 직종을 전환하려는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전직의 종사상 지위에 따라서는 별다른 특징을 발견할 수 없었다.

전 직장의 근속기간과 실업기간 등 경제적 요인들이 직종 전환 욕구에 미치는 효과를 이해하기 위해 직종 전환을 희망할 때 '1'의 값을, 아닐 경우는 '0'의 값을 갖는 종속변수를 설정하고, 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성(sex), 연령(age), 연령의 제곱(age square), 교육기간(education), 실업기간(unemployment duration), 비자발적 이직여부(involuntary job separation), 전 직장의 임금수준(wage), 전 직장의 근속년수(work experience)를 설명변수로 하는 로짓모형을 설정하여 추정하였다.<sup>37)</sup>

추정결과 실업기간의 장기화에 따라 다른 직종에의 재취업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아진다. <표 IV-4>의 모형 1에서 성과 연령은 통계적 유의성을 상실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표 IV-3>과는 대비된다. 여성과 젊은 층은 직장경험이 적고, 근속기간이 짧아 직업 특수적 인적자본의 형성 정도가 작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여성의 단절적 직업경력으로 인하여 취업경험이 인적자본의 축적 또는 생산성의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직종변경에 따른 기회비용이 여성이나 젊은 층의 경우에는 낮다는 점이 이들 계층의 직종변경을 용이하게 만들 것이다. 모형 1에서는 인적자본 또는 생산성의 척도로 간주될 수 있는 전 직장의 근속기간 및 소득수준이 추정식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성과 연령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이 낮아진 것으로 추

36) 본고에서는 비임금근로자도 직종 전환의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 전 직장의 고용형태를 임금근로자로 제한하여도 직종 전환을 희망하는 비율에는 별 다른 차이가 없었다.

37) 이 추정모형은 종속변수인 직종전환 희망여부와 이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경제적 변수들 사이의 종합적인 상관관계 분석이며, 인과관계의 추정은 아니다.

측된다. 성, 연령, 교육수준만을 이용하여 추정된 모형 2에서는 성과 연령에 대한 추정치의 통계적 유의성이 크게 향상되어 이러한 추측을 지지하고 있다.

<표 IV-3> 직종과 산업의 전환 희망률: 실업자

(단위 : %)

	직종의 전환 희망률	산업의 전환 희망률
전 체	39.3	42.9
성별		
여성	43.4	45.1
남성	36.1	41.4
연령대별		
15-<20세	54.9	55.6
20-<30세	43.3	48.7
30-<40세	43.0	43.6
40-<50세	33.6	33.6
50-<60세	34.3	41.5
60세 이상	30.0	45.1
학력별		
초등학교졸 이하	35.9	39.2
중졸	28.6	37.0
고졸	41.2	46.1
전문대졸	48.8	47.8
대학졸 이상	48.5	43.5
전 직장 고용형태별		
정규직 임금근로	38.8	43.8
비정규직 임금근로	38.9	42.8
비임금근로	42.3	40.0

주: 1)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제1차년도와 제2차년도 데이터를 통합하여 분석하였음.

2) 전환율의 계산에서 직종은 <표 IV-2>에 나타난 직종을 기준으로, 산업은 <표 IV-6>에 나타난 산업을 기준으로 전환의 희망 여부를 계산하였음.

또한 실직기간의 장기화에 따라 직종 전환을 희망하는 실업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실업자는 어떤 일자리라도 우선 취업하려는 경향이 강하며, 이에 전 직장과 동일한 직종을 고집하기보다는 취업이 용이한 직종으로 취업하려는 의향이 높을 것이다. 실제로도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는 전문직이나 준전문직보다 단순근로 또는 기능 및 기계조작·조립직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sup>38)</sup> 전 직장의 소득에 따라서는 소득이 높았을수록 동일 직장에의 취업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다. 소득이 높았던 근로자는 직종 특수적 인적자본을 상대적으로 많이 축적하고 있고, 직장전환에 따르는 손실액이 큰 계층이기 때문에 동일 직종의 취업을 희망할 가능성이 크다. 비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직장전환의 희망 비율이 낮다. 이는 비자발적 이직자가 전 직장의 장기근속자나 고연령 계층에 집중되어 있고, 직장전환에 따른 기회비용이 커서 동일 직종에의 취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표 IV-4> 직종변환 희망률의 결정요인 추정: 로짓모형<sup>39)</sup>

	모형 1	모형 2
상수항	0.9459(0.203)	0.0894(0.879)
성별(1: 남성, 0: 여성)	0.0692(0.670)	-0.3010(0.018)
연령(세)	0.0066(0.841)	-0.0440(0.113)
연령의 제곱	-0.0001(0.726)	0.0004(0.191)
교육기간(년)	0.0756(0.003)	0.0544(0.009)
구직기간(개월)	0.0176(0.006)	-
비자발적 이직여부(1: 비자발적)	-0.3953(0.010)	-
전 직장의 근속기간(년)	0.0069(0.549)	-
전 직장 소득의 로그값	-0.5133(0.000)	-

주: ( )안은 P(>|z|)값임.

38) 구직기간 6개월 미만의 실업자 중 전문직 희망자는 5.5%, 준전문직 희망자는 10.4%를 차지하고 있으나, 구직기간 6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자에서는 전문직 희망자 4.4%, 준전문직 희망자 8.6%로 나타난다. 그러나 단순근로는 6개월 미만 실업자의 22.6%와 6개월 이상 실업자의 26.4%가 희망하고 있었으며, 기능 및 기계조작·조립직은 각각 18.5%와 19.7%가 희망하여 반대 현상이 발견된다.

39) 모형 1의 경우 LR chi2 값이 66.57로 모형 자체는 유의하나 Pseudo R2가 0.0552에 불과하여 모형의 설명력은 매우 약하다. 이는 모형 2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2) 희망 산업

실업자가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산업은 <표 IV-5>에 나타나 있다.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가장 많아 1998년의 경우 33.9%, 1999년에는 25.4%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이다. 1998년에 비해 1999년에는 제조업과 부동산 임대·서비스업에 종사하려는 실업자의 비중 증가가 특징적이다.<sup>40)</sup>

전 직장의 산업과 희망 직장의 산업이 일치하는 정도를 살펴보면, 전직 건설업 종사자의 73.7%가 계속 건설업 취업을 희망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기능이 업종에 특화되어 있는 건설업의 특징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부동산업과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서 동일 산업에 종사하려는 실업자의 비중이 높은 반면, 제조업과 전기, 운수, 금융업에서는 그 비중이 각각 41.3%와 38.6%로 상당히 낮은 편이다. 특히 제조업에 종사하였던 실업자의 22.4%와 13.6%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나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의 취업을 희망하여 탈 제조업의 경향을 엿볼 수 있다.

<표 IV-5> 실업자의 희망 산업

(단위 : %, 명)

	1998	1999
농림수산업	1.4( 13)	1.1( 5)
제조업(광업 포함)	11.0(105)	17.9( 83)
건설업	16.8(161)	14.2( 66)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33.9(325)	25.4(118)
전기, 운수 및 금융	5.7( 55)	5.6( 26)
부동산 임대·서비스	11.3(108)	17.7( 82)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20.0(192)	18.1( 84)
전 체	100.0(959)	100.0(464)

주:( )안은 응답자수임.

실업자 전체적으로는 42.9%가 산업전환을 희망하여 직종전환의 희망률 39.3%보다 다소 높다. 실업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산업전환 희망률을 보면, <표 IV-3>과 같이, 남녀 성별로는 여성의 산업전환 희망률이 높으며, 연령대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학력에 따라서는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산업전환을 희망하는 실업자의 비중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추이는 직종전환 희망률의 추이와 거의 유사하여, 직종과 업종이 상당 부분 연계되어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표 IV-6> 실업자의 전 산업과 희망 산업

(단위 : %, 명)

40) 제조업과 부동산 임대·서비스업의 취업 희망자가 증가한 것이 경기변동을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통계상의 편차인지 그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

이전 직장의 산업	희망 직장의 산업						소 계
	제조업	건설	도소매 음식·숙박	전기 운수 금융	부동산	사회·개인 서비스	
제조업(광업 포함)	41.3	8.3	22.4	4.2	9.5	13.6	100.0(264)
건설업	1.6	73.7	9.1	4.3	4.3	6.5	100.0(186)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4.9	2.4	66.2	3.5	11.5	10.5	100.0(287)
전기, 운수 및 금융	5.7	4.3	31.4	38.6	10.0	7.1	100.0( 70)
부동산 임대·서비스	0.0	11.5	9.6	0.0	67.3	11.5	100.0( 52)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5.9	3.5	21.1	2.3	10.5	55.6	100.0(171)

주: 1)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제1차년도와 제2차년도 데이터를 통합하여 분석하였음. 또한, 농림수산업은 표본 수가 적어 제외하였음.

2) ( )안의 값은 해당되는 응답자수임.

그러나 실업자의 인구학적 특성변화에 따른 업종전환 희망률의 변화 추이는 직종전환 희망률만큼 뚜렷하지는 않다. 직종전환 희망률의 경우와 똑같은 설명변수를 사용하여 산업전환 희망률의 결정요인을 추정한 결과는 이를 입증하고 있다.<sup>41)</sup> <표 IV-7>의 모형 1에서 교육기간과 전 직장의 비자발적 이직여부, 그리고 전 직장의 소득변수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산업전환의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구직기간은 산업변환의 희망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직종변환의 경우와 대비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산업특수적 인적자본이 존재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즉 산업특수적 인적자본으로 인해 다른 산업으로 전환하였을 경우 임금상실이 우려되고, 이에 실업이 장기화되더라도 동일 산업에의 취업을 희망하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가정된다. 또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전 직장을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였을 때, 전 직장 소득이 높을 때 동일 산업에 재취업하려는 실업자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직종전환의 경우와 일치한다.

<표 IV-7> 산업변환 희망률의 결정요인 추정: 로짓모형<sup>42)</sup>

41) 직종전환의 경우와 똑같이 산업전환을 희망할 때에는 '1'의 값을, 아닐 경우는 '0'의 값을 지니는 종속변수를 설정하였다.

42) 모형 1의 경우 LR chi2 값이 34.81로 모형 자체는 유의하나 Pseudo R2가 0.0312로 직종전환 희망률의 추정결과보다 모형의 설명력이 더 취약하다. 이는 모형 2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이 로짓모형은 설명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구조적 모형이 아니며, 따라서 해석상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모형 1	모형 2
상수항	2.0945(0.005)	1.1019(0.068)
성별(1: 남성, 0: 여성)	0.1376(0.410)	-0.1618(0.216)
연령(세)	-0.0441(0.185)	-0.0860(0.002)
연령의 제곱	0.0006(0.173)	0.0010(0.005)
교육기간(년)	0.0442(0.078)	0.0382(0.077)
구직기간(개월)	-0.0017(0.782)	-
비자발적 이직여부(1: 비자발적)	-0.3074(0.049)	-
전 직장의 근속기간(년)	-0.0032(0.775)	-
전 직장 소득의 로그값	-0.4497(0.000)	-

주: ( )안은 P(>|z|)값임.

### 3) 희망하는 고용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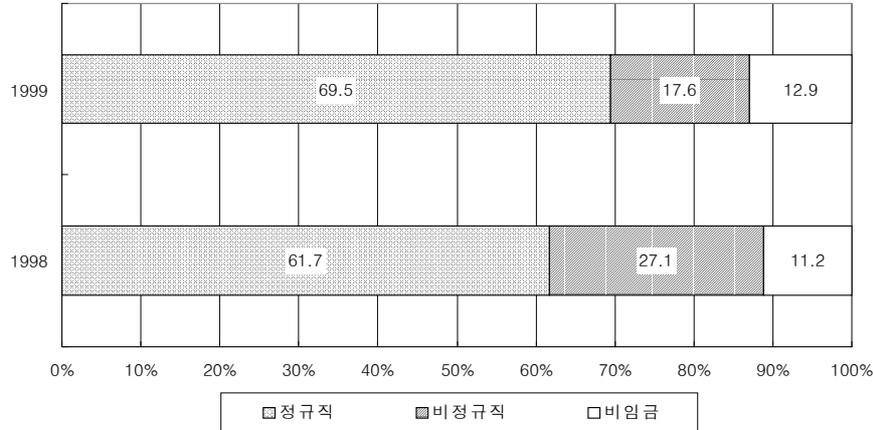
<표 IV-8>에서 1998년의 제1차 조사 당시 실업자들이 찾고 있는 직장의 형태는 정규직 임금근로가 61.7%, 비정규직 임금근로 27.1%, 비임금근로 11.2%의 순서로 나타났다. 1999년의 제2차 조사에서는 실업자의 희망 고용형태가 변화하여 정규직 임금근로가 69.5%로 증가한 반면, 비정규직 임금근로는 17.6%로 10%포인트 가량 낮아졌다.([그림 IV-1] 참조) 이러한 변화는 1999년도의 경기회복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1998년도에는 비정규직 임금근로자였던 실업자의 48.1%와 정규직 임금근로자였던 실업자의 76.6%가 정규직에의 재취업을 희망하였으나, 1999년에는 정규직 취업 희망자가 크게 늘어 전직 비정규직 실업자의 65.6%와 전직 정규직의 83.8%가 정규직 취업을 희망하고 있었다는 점도 이러한 판단을 지지해 준다.

<표 IV-8> 희망하는 고용형태의 분포: 실업자

(단위 : %)

	1998			1999		
	정규직 임금	비정규직 임금	비임금	정규직 임금	비정규직 임금	비임금
전 체	61.7	27.1	11.2	69.5	17.6	12.9
성 별						
여 성	59.7	31.9	8.5	66.7	25.5	7.8
남 성	63.5	22.9	13.6	71.3	12.5	16.2
연령대별						
15- < 20세	46.6	50.9	2.6	60.0	35.0	5.0
20- < 30세	72.0	21.7	6.3	86.1	9.7	4.2
30- < 40세	60.9	21.8	17.2	59.3	16.7	24.1
40- < 50세	55.1	28.2	16.7	69.8	11.5	18.8
50- < 60세	56.6	27.4	16.0	61.9	19.1	19.1
60세 이상	66.7	32.0	1.3	59.1	40.9	0.0
학력별						
초등학교졸 이하	59.2	33.5	7.3	60.6	31.8	7.6
중졸	29.4	28.3	12.3	69.2	19.8	11.0
고졸	63.4	22.7	13.9	67.9	15.6	16.5
전문대졸	53.3	39.2	7.5	74.2	16.1	9.7
대졸 이상	79.1	10.0	10.9	82.7	5.8	11.5
전 직장의 고용형태						
정규직 임금근로	76.6	13.8	9.7	83.8	2.9	13.3
비정규직 임금근로	48.1	45.0	6.9	65.6	26.0	8.3
비임금근로	45.0	15.5	39.5	44.7	10.5	44.7
전 직장의 이직 원인						
자발적	60.0	27.1	12.9	71.6	7.8	20.6
비자발적	66.5	21.7	11.8	69.3	17.5	13.1
구직기간						
6개월 미만	59.4	30.0	10.7	67.2	19.7	13.1
6개월 ~ 1년 미만	70.2	21.2	8.6	63.8	21.3	14.9
1년 이상	60.4	24.9	14.7	81.8	8.2	10.0

[그림 IV-1] 실업자의 희망 고용형태 분포



성별로는 남성이 정규직 임금근로나 자영업을 주로 희망하는데 비해 여성은 비정규직 취업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다. 또한 연령대별로도 30대 이후 자영업이나 비정규직을 희망하는 비율이 증가하며, 학력에 따라서는 교육수준이 낮은 계층에서 비정규직 취업을 희망하는 실업자들이 많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들과 일치하고 있다.

실업기간이 희망 고용형태에 미치는 영향은 명확한 형태를 보이고 있지 않다. 실업의 장기화는 실업에 따른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에 실업자들은 가능한 한 빨리 실업에서 탈출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희망하는 비중이 증가할 것이라고 혹자는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추론의 반대 논리도 만만치 않다. 반대 논리는 장기실업자의 의중임금이 상대적으로 높고, 다른 생계수단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실업이 장기화하더라도 비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이다. 또한 정규직을 고집하기 때문에 실업기간이 장기화되었을 가능성도 제기할 수 있다. <표 IV-8>은 상반된 논리들에 대한 뚜렷한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실업기간과 희망 고용형태 사이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단순 로짓모형을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 장기실업자들은 정규직 임금근로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43)</sup> 이러한 추정결과가 특정 개인근로자의 경우 실업의 장기화에 따라 정규직 임금근로를 희망하는 성향이 점점 높아져 간다는 점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추정결과는 정규직 희망자들의 장기실업 위험도가 높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표 IV-9> 희망 고용형태의 결정요인 추정: 로짓모형<sup>44)</sup>

43) 정규직 임금근로를 희망할 경우에는 '1'의 값을, 비정규직 임금근로를 희망하면 '0'의 값을 갖는 종속변수를 설정하고, 인구학적 특성 차이가 미치는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성, 연령, 교육 및 구직기간을 설명변수로 하는 모형을 추정하였다.

44) 이 로짓모형들은 설명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구조적 모형이 아니며, 따라서 해석상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추정결과
상수항	-1.6525(0.005)
성별(1: 남성, 0: 여성)	0.4055(0.003)
연령(세)	0.0824(0.002)
연령의 제곱	-0.0010(0.003)
교육기간(년)	0.0596(0.014)
구직기간(개월)	0.0149(0.019)
표본수	1,091
LR chi2	33.09
Pseudo R2	0.0248

주: 1) 모형 2는 1998년의 자료만으로 추정한 결과임.

2) ( )안은 P(>|z|)값임.

## 나. 직장탐색의 방법 및 강도

### 1) 구직방법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는 실업자들이 사용하는 9가지의 구직방법에 대해 질문하였다.<sup>45)</sup> 구직방법은 공식적(formal) 방법과 비공식적(informal) 방법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공식적 방법은 <표 IV-10>에서 ③번, ④번, ⑤번 및 ⑧번으로 취업정보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구직방법이며, 나머지는 비공식

45) 구직방법의 구체적인 항목은 1.학교, 학원, 스승의 추천이나 소개, 2.친구, 친지의 소개, 3.공공직업안내소를 통해서, 4.사실직업안내소를 통해서, 5.신문·TV·벽보 등의 구인광고, 6.일하고 싶은 곳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7.가족을 통하여, 8.인터넷·천리안 등 전산망을 통하여, 9.기타의 아홉 가지이다. 질문 방식은 사용하는 모든 구직방법에 대해 표시(○)하도록 하여 복수응답이 허용되었다.

&lt;표 IV-10&gt; 실업자의 구직방법과 비중: 1998년과 1999년

(단위 :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전체 1998년	10.5	62.8	12.7	5.7	57.3	35.8	14.5	6.7
1999년	9.1	59.2	14.1	2.4	50.3	28.3	14.8	9.1
성별								
여성	10.9	57.2	10.7	5.0	61.0	27.8	14.7	6.6
남성	11.5	55.2	14.1	2.1	54.2	20.8	14.6	8.9
	10.2	67.5	14.3	6.4	54.1	42.7	14.3	6.8
	7.6	61.7	14.2	2.6	47.9	33.0	14.9	9.2
연령대별								
10대	20.7	52.6	8.6	6.9	66.4	33.6	17.2	6.9
	30.0	52.5	2.5	0.0	60.0	25.0	15.0	12.5
20대	22.2	60.1	16.2	4.3	67.4	28.3	15.7	15.7
	19.4	56.3	11.1	2.1	61.8	21.5	14.6	21.5
30대	3.5	64.4	12.3	4.2	58.6	42.5	15.3	3.5
	1.9	61.1	8.3	2.8	54.6	22.2	18.5	6.5
40대	2.6	67.5	7.7	7.3	53.4	36.8	13.3	0.9
	2.1	66.7	15.6	4.2	47.9	35.4	15.6	1.0
50대	2.9	70.9	14.3	8.6	41.1	44.0	12.0	1.1
	0.0	55.6	28.6	1.6	38.1	52.4	9.5	1.6
60대 이상	0.0	53.3	13.3	5.3	34.7	33.3	10.7	1.3
	2.3	59.1	25.0	2.3	15.9	18.2	11.4	0.0
학력별								
초등학교 이하	0.9	66.1	7.3	7.8	41.3	39.5	12.4	0.5
	0.0	56.1	21.2	4.6	33.3	36.4	18.2	0.0
중졸	4.6	69.0	12.8	7.3	56.6	38.8	15.1	1.8
	7.7	68.1	15.4	0.0	40.7	26.4	13.2	1.1
고졸	7.1	63.6	12.9	4.7	60.3	34.8	15.1	3.7
	6.7	62.5	12.1	2.7	60.3	25.9	13.4	6.7
전문대졸	28.1	55.8	12.1	3.5	64.3	38.2	15.6	18.1
	25.8	54.8	14.5	4.8	59.7	24.2	21.0	25.8
대졸 이상	25.5	52.7	22.7	7.3	63.6	22.7	12.7	21.8
	13.5	38.5	11.5	0.0	34.6	36.5	11.5	25.0

주: 1) 사용된 구직방법은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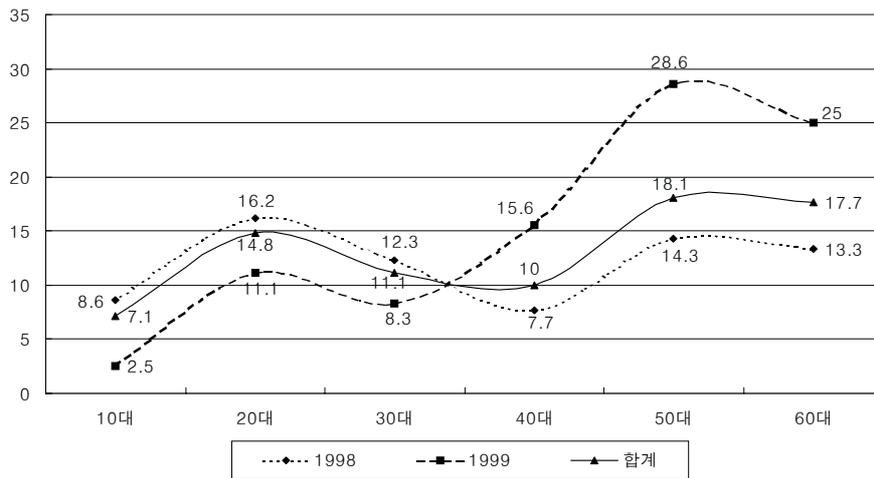
- |                       |                       |
|-----------------------|-----------------------|
| ① 학교, 학원, 스승의 추천이나 소개 | ② 친구, 친지의 소개          |
| ③ 공공직업안내소를 통해서        | ④ 사설직업안내소를 통해서        |
| ⑤ 신문·TV·벽보 등의 구인광고    | ⑥ 일하고 싶은 곳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
| ⑦ 가족을 통하여             | ⑧ 인터넷·천리안 등 전산망을 통하여  |

2) 각 항의 첫 번째 값은 1998년도의 비중을, 두 번째 값은 1999년도의 비중임. 또한 복수응답이 가능하도록 질문하였음.

적 방법으로 사적인 통로를 통해서 취업정보의 제공 및 채용이 이루어지는 구직방법을 뜻한다.46) 일반적으로 비공식적인 구직방법은 공식적인 구직방법에 비해 선호되며, 직장제의(job offer)를 받거나 직장제의를 수락(acceptance)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Holzer, 1987, 1988).

다른 연구결과(금재호, 1997, 1999; 한국노동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와 마찬가지로 실업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법은 '① 친구, 친지의 소개'를 통해서 직장을 알아보는 것으로 실업자의 62.8%가 이 방법을 1998년에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성, 연령, 학력 등과 상관없이 거의 모든 계층에서 가장 선호하는 구직방법이다. 그 다음으로는 '⑤ 신문·TV·벽보 등의 구인광고'를 이용하는 방법과 '⑥ 일하고 싶은 곳을 직접 찾아다니면서'의 순서로 나타났다. 구인광고를 이용하는 방법은 남성보다 여성이, 그리고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은 계층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대해, 사업체 방문은 여성보다는 남성이, 그리고 20대 이하의 젊은 층보다는 30대 이상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림 IV-2] 연령대별 공공직업안내소의 이용률



우리 나라에서도 구직자들은 공식적인 방법보다 비공식적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특히 30대 이상의 연령층을 위한 외부노동시장이 취약함에 따라, 이들 연령층의 대부분은 구직을 공식적인 방법이 아니라 개인적 인맥이나 연줄과 같은 비공식적인 방법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정보를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와의 격차를 확대시키며, 취업으로 계층의 장기 실업 및 일궁합(job-matching)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개인적 인맥이나 연줄을 통해 취업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실업자는 좋은 직장에 일찍 취업할 수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실업자는 능력에 비해 처지는 직장에 취업하거나 장기간 실업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공공직업소개소가 비공식적 구직방법 중심의 취업알선이 초래할 수 있는 비효율성을 완화·해소하는 기능을 담당하여야 하나 우리 나라는 그동안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공공직업소개소

46) 직장탐색 방법을 공식적 방법과 비공식적 방법으로 구분한 연구자는 Lee(1969)이다. Lee(1969)는 시카고 노동시장의 분석을 통해서 구직자뿐만이 아니라 사업주도 비공식적인 방법을 선호하며, 비공식적 방법을 통해 취업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의 역할이 아직도 취약하다.

외환위기 이후 공공직업안내소에 대한 이용률이 급증하여 1998년에 12.7%의 구직자와 1999년에 14.1%의 구직자들이 이를 활용하였다.<sup>47)</sup> 이는 민간직업안정기관을 이용하는 빈도보다 훨씬 많으며, 그동안 공공직업안정기관의 기능이 크게 강화되었음을 보여준다.<sup>48)</sup> 그러나 연령대별로 [그림 IV-2]와 같이 20대와 50·60대에서 공공직업안내소를 많이 이용하는 쌍봉 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진로 전환의 가능성이 높고 심층 상담·지원이 필요한 30·40대의 공공직업안내소 방문은 상대적으로 적다. 실업급여를 받거나 직업훈련, 공공근로사업 등의 실업극복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공공직업안정기관에 먼저 구직등록을 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음에도 30·40대의 이용률이 낮은 것은 아직도 공공직업안정 서비스부문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점을 시사한다.<sup>49)</sup>

1998년 이후 실업자의 구직방법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20대의 고학력 계층을 중심으로 인터넷 등의 네트워크를 통한 구직활동이 급증하였다는 사실이다. 전산망을 이용하는 실업자의 비중은 1998년과 1999년 모두 민간직업소개소의 이용률을 넘어섰으며, 이용률의 격차도 벌어지고 있다. 1999년의 경우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구직방법은 대졸 이상의 고학력 실업자에게 친구 및 친지 소개, 사업체 직접 접촉, 구인광고의 뒤를 이어 네 번째로 많이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구인·구직방법의 중요성은 앞으로도 계속 높아져 갈 것이다.

<표 IV-11> 실업자의 구직기간과 구직방법 : 1998년과 1999년

(단위 :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1998년								
6개월 미만	11.1	65.1	12.0	5.6	54.7	35.5	15.5	6.7
6개월~1년 미만	10.3	61.9	17.6	5.3	64.2	35.4	13.9	8.0
1년 이상	10.2	57.1	9.4	7.4	57.6	38.0	10.6	5.3
1999년								
6개월 미만	10.7	55.7	14.3	2.9	45.9	29.5	11.9	9.4
6개월~1년 미만	8.5	60.6	13.8	0.0	48.9	26.6	13.8	9.6
1년 이상	6.4	66.4	12.7	3.6	57.3	30.0	20.0	6.4

주: 1) 사용된 구직방법은 다음과 같음.

- ① 학교, 학원, 스승의 추천이나 소개      ② 친구, 친지의 소개

47) 한국노동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9)에서는 실업자의 14.0%가 공공직업안정기관을 방문하여 구직정보나 구직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환위기 이전인 1996년에는 실업자의 4.8%만이 공공직업안정기관 또는 민간직업안정기관을 이용하여(금재호, 1997), 외환위기 과정에서 공공직업안정기관의 역할이 크게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48) 미국에서는 공공직업안정기관이 친구 및 친지 소개 다음으로 많이 활용되는 구직방법으로 조사되었다.(Bradshaw, 1973) 1986, 1987년의 NLSY 자료를 분석한 Keum(1992)도 전체 실업자의 41.0%가 구직방법으로 공공직업안내소를 이용하였음을 발견하였다.

49) 또한 50·60대도 공공근로사업 등 각종 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공공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하는 비율이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공공직업안정기관은 근로자의 모든 계층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보다는 젊고 고학력인 계층을 주고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금재호, 1999)

- |                    |                       |
|--------------------|-----------------------|
| ③ 공공직업안내소를 통해서     | ④ 사설직업안내소를 통해서        |
| ⑤ 신문·TV·벽보 등의 구인광고 | ⑥ 일하고 싶은 곳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
| ⑦ 가족을 통하여          | ⑧ 인터넷·천리안 등 전산망을 통하여  |

구직기간의 장기화에 따라 구직방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1998년의 경우 <표 IV-11>에서 구직기간 6개월 미만의 단기 실업자와 1년 이상의 장기실업자간 사용하는 구직방법의 차이가 크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1999년의 경우도 비슷하다. 1999년에는 장기실업자들이 신문 등 구인광고와 가족, 친구, 친지 등의 구직방법을 상대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

## 2) 사용한 구직방법의 수와 구직활동시간

실업자가 사용하는 구직방법의 숫자는 1주당 구직시간과 함께 구직활동의 강도를 측정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고 있다. 설문문항에 나타난 9가지의 직장탐색 방법 중에서 1998년도에 실업자가 사용한 구직방법의 숫자는 평균 2.087개로 1999년도의 실업자가 사용한 평균 1.911개보다 0.176개가 많아, 실업난이 극심할 때 실업자의 직장탐색 강도도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sup>50)</sup> 실업률이 높아질수록 구직방법의 수가 증가하는 현상은 미국에서도 발견된다.(Blau and Robins, 1989) 실업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서는 <표 IV-12>와 같이 여성보다 남성의 직장탐색 강도가 높으며, 학력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용하는 구직방법수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 가장 많은 구직방법을 사용하는데, 이는 20대 실업자가 그만큼 열심히 구직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연령층에 비해 구직활동의 이점(advantage)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즉 20대는 '① 학교, 학원, 스승의 추천이나 소개' 또는 '⑧ 인터넷·천리안 등 전산망을 통하여'와 같은 구직방법에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구직활동의 방법수가 많게 조사되는 것이다. 구직활동의 강도를 나타내는 또 하나의 척도인 구직활동시간이 50대까지 증가하는 현상도 이러한 결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20대 연령층이 지니는 이러한 이점은 고학력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있음을 <표 IV-12>에서 발견할 수 있다.

구직강도를 나타내는 또 하나의 기준인 구직활동시간은 1주당 평균 9.58시간으로 조사되었다. 남성의 구직활동시간이 여성보다 4.71시간 더 많으며, 가구주의 구직활동시간도 주당 12.18시간으로 배우자의 6.62시간보다 2배 가까이 많다. 연령대별로는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구직활동시간도 50대까지는 함께 늘어나는 한편, 학력에 따라서는 전문대졸의 구직활동시간이 주당 7.25시간으로 가장 낮은 것이 특징이다. 이들의 구직활동시간이 적은 것은 전문대졸 실업자 중에서 대학 재학생 또는 휴학생의 비율이 50%대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의 구직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에 기인한다. 가구소득이 낮아 생계가 어렵거나 실업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취업욕구가 강화되고, 사용하는 구직방법의 수도 늘어날 것으로 추론될 수 있다. Holzer(1987, 1989)는 구직방법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직장제의를 받을 확률도 증가하는 것을 발견하여 이

50) 이러한 연도별 차이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러한 추론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있다. Blau and Robins(1989), Bradshaw(1973) 등에 의하면 성, 인종, 학력과 같은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실업자가 사용하는 구직방법이 달라지고, 구직방법은 직장제의를 받을 확률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sup>51)</sup> Campbell and Marsden(1988)도 고용주가 어떤 채용방법을 선호하는가에 따라 구직방법의 효과도 달라진다는 점을

<표 IV-12> 사용한 구직방법의 수와 1주당 구직활동 시간

(단위 : 개, 시간)

	1998년		1999년의 구직방법 수
	구직방법 수	구직활동 시간	
전 체	2,087	9.58	1,911
성별			
여 성	1,971	7.07	1,849
남 성	2,186	11.78	1,950
연령대			
15 ~ 19세	2,138	7.69	1,975
20 ~ 29세	2,321	9.08	2,097
30 ~ 39세	2,054	9.80	1,815
40 ~ 49세	1,923	9.74	1,906
50 ~ 59세	1,983	11.89	1,921
60세 이상	1,640	8.84	1,477
학력별			
초등학교 졸업 이하	1,807	10.04	1,818
중졸	2,078	10.97	1,736
고졸	2,041	9.78	1,929
전문대졸	2,382	7.25	2,306
대졸 이상	2,336	9.25	1,788

주 : 주당 구직활동시간은 1998년의 제1차 조사에서만 질문하였음.

밝히고 있다. 따라서, 가구생계가 어렵거나 실업이 장기화될 때, 실업자는 구직방법을 바꾸거나 수를 늘리기보다 구직활동에 투입하는 시간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구직통로가 제한되어있는 중·장년층 이상의 고령층, 건설업 종사자, 저학력자들은 생계가 어렵다고 하여 ‘① 학교, 학원, 스승의 추천이나 소개’와 같은 구직방법을 사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노동패널자료의 분석결과도 실업기간은 사용하는 직장탐색방법의 숫자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52)</sup> 구직방법의 숫자는 최대 ‘8’까지의 값을 지니며, 90%의 응답자가 3개 이하의 구직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구직방법의 수가 2개 이하일 때는 ‘0’의 값을, 3개 이상은 ‘1’의 값을 부여하는 종속변수를 설정하고, 성(sex), 연령(age), 연령의 제곱(age square), 교육기간(education), 가구소득(family income) 및 구직기간(job search duration)을 설명변수로 하는 로짓모형(모형 1)을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성, 학력은 구직방법의 수에 정(+)의 영향을 미치나 다른 설명변수들

51) 또한 Mortensen and Vishwanath(1990), Blau and Stern(1988), Keum(1992) 등은 근로자가 구직방법을 선택하는 결정요인과 사용된 구직방법이 구직활동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적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추정하였다.

52) 구직기간과 구직방법수의 상관계수는 -0.0414로 나타났다.

은 10%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상실하고 있다.

<표 IV-13> 1주당 구직활동시간의 결정요인 추정 : Logit 및 OLS

	모형 1 (종속변수: 구직방법의 수)	모형 2 (종속변수: 구직활동시간)
상수항	-1.2255(0.037)	4.5928(0.084)
성별(1: 남성, 0: 여성)	0.4514(0.001)	4.9546(0.000)
연령(세)	-0.0062(0.823)	0.2977(0.013)
연령의 제곱	-0.0002(0.642)	-0.0037(0.015)
교육기간(년)	0.0464(0.052)	-0.2034(0.057)
구직기간(개월)	0.0058(0.221)	-0.0300(0.170)
가구 월평균 소득(만원)	0.0004(0.268)	-0.0023(0.168)
	표본수: 1,202 LR chi <sup>2</sup> : 45.12 Pseudo R <sup>2</sup> : 0.0303	표본수: 1,163 F-value: 14.03 Adjusted R <sup>2</sup> : 0.0631

주: 1) 모형 1, 2 모두 1998년의 자료만으로 추정된 결과임.

2) ( )안은 P(>|z|)값임.

더불어 실업기간이 구직활동 투입시간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성, 연령, 학력 등의 인구학적 변수를 통제한 단순회귀모형(모형 2)을 추정하였다. 추정한 결과, 구직방법의 수에 대한 추정결과와 비슷하게, 실업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구직활동시간도 증가할 것이라는 증거를 발견하는 데 실패하였다.<sup>53)</sup> 이러한 결과가 외환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 노동시장의 특성에 기인하는지는 불명확하다. 그러나 실업의 장기화가 구직방법의 수와 구직활동시간 모두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상관계수의 부호가 미약하나마 부(-)의 값을 보인다는 분석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이는 실업의 장기화가 구직활동 의욕을 자극시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구직자를 실망시키고 구직활동의 의욕을 도리어 감소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 2. 장기실업자의 희망임금

### 가. 희망임금의 수준

의중임금(reservation wage)은 근로자의 취업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적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근로자는 제의된(offered) 일자리의 임금수준과 자신의 의중임금을 비교하여 일자리의 취업여부를 결정한다. 의중임금의 수준은 근로자의 성, 연령, 학력 등의 인구학적 배경뿐만이 아니라 직장경력, 종사하던 산업, 직업 및 고용형태와 같은 근로자의 경제적 배경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또한 실업률, 임금, 물가, 경제성장률 같은 거시적 변수도 의중임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특히 실업의 장기화에 따라 근로자는 자신의 의중임금 수준을 점차

53) 구직기간과 구직활동기간 사이의 상관관계수 값은 -0.389로 계산되었다.

낮추어갈 것이다.<sup>54)</sup>

의중임금의 수준은 상황에 따라 변화하기 쉽고 매우 개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료화하기 매우 어렵다.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는 ‘그렇다면, 희망하는 일자리에서의 수입은 적어도 얼마나 되어야 합니까?’라고 응답자에게 질문하여 의중임금(reservation wage)의 수준을 파악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 때의 대답은 정확하게 의중임금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가 희망하는 희망임금의 성격이 강하다. 그 이유는 의중임금은 직장제(job offer)를 받는 실제적 상황 아래에서 근로자가 마음속으로 결정하는 최소한의 임금수준이기 때문이다.

<표 IV-14> 실업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희망임금

(단위 : 만원)

	1998	1999
전 체	98.6( 66.2)	105.3( 63.1)
성별		
여 성	74.0( 38.2)	76.3( 47.1)
남 성	119.5( 77.0)	123.7( 65.1)
연령대별		
15 ~ 20세	71.6( 92.4)	73.5( 63.6)
20 ~ 29세	89.6( 42.1)	93.6( 38.6)
30 ~ 39세	111.0( 67.5)	125.1( 79.6)
40 ~ 49세	116.4( 84.6)	122.9( 63.3)
50 ~ 59세	105.6( 59.4)	113.5( 68.9)
60세 이상	72.6( 32.9)	73.9( 39.1)
학력별		
초등학교졸 이하	90.6( 76.4)	81.1( 36.5)
중졸	96.8( 78.6)	94.4( 60.2)
고졸	101.5( 57.0)	107.5( 61.5)
전문대졸	87.5( 57.9)	102.0( 68.3)
대졸 이상	124.6( 65.3)	149.4( 73.7)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	125.7( 76.1)	129.7( 69.2)
배우자	76.2( 45.3)	79.0( 63.1)
자 녀	87.8( 60.6)	92.1( 47.1)
여타 가구원	89.0( 48.4)	88.2( 32.6)

주:( )안은 표준편차 값임.

54) 관련된 연구로는 Keum(1992), Wolpin(1984, 1987) 등을 들 수 있다.

<표 IV-14>에서 실업자가 취업시 받기를 희망하는 최소한의 임금은 1998년 98만 6천원, 1999년 105만 3천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분석대상을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임금근로를 희망하는 응답자로 제한하였을 경우에는 희망임금이 각각 90만 3천원과 92만 9천원으로 하락하여 자영업 희망자의 희망임금 수준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희망임금의 분포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을 재확인하고 있다. 남성보다 여성의 희망임금이 낮아, 여성의 희망임금은 1998년에 남성의 61.9%에 불과하며, 1999년에도 61.7%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희망임금도 높아지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연령의 증가에 따라 희망임금도 같이 증가하였다가 30·40대를 정점으로 하락하는 역U자 형태를 보이고 있다.<sup>55)</sup> 실업자의 가구 내 위치에 있어서도 가구주의 희망임금이 배우자보다 훨씬 높다. 이러한 희망임금의 분포는 30·40대의 남성 고학력자들이 인적자본을 가장 많이 축적하고 있으며, 생산성 및 임금도 높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실업자가 취업하려는 직업의 특성도 희망임금과 관련이 있어 산업별로는 건설업 또는 전기, 운수 및 금융업에 취업하려는 구직자와 직종별로는 전문직 및 관리직에 취업하려는 구직자의 희망임금이 높다. 또한 희망 고용형태에 따라서는 자기 사업을 하려는 실업자의 희망임금이 1998년의 경우 164만 2천원으로 정규직 희망자의 97만 2천원이나 비정규직 희망자의 74만 6천원보다 많게 나타나고 있다. 실업자의 특성에 따른 희망임금의 분포는 1998년과 1999년이 서로 비슷하여 실업자 특성별 희망임금의 분포가 외환위기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는 가설을 지지한다.

구직기간에 따라서는 구직기간 6개월 미만의 실업자보다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의 희망임금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희망임금 수준이 높은 근로자가 장기간 실업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실업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개인 근로자의 희망임금 수준은 하락하지만 이들의 희망임금 수준 자체가 처음부터 높았기 때문에 회귀분석에서는 구직기간과 희망임금 사이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거나, 또는 <표 IV-15>처럼 구직기간에 따라 희망임금도 높아지는 것처럼 나타나는 것이다.<sup>56)</sup>

#### <표 IV-15> 실업자의 구직활동과 희망임금

(단위 : 만원)

55) 전문대졸 실업자의 희망임금이 고졸자의 희망임금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전문대졸에 상당수의 대학 휴학생 또는 재학생이 포함되었고, 이들의 대부분은 임시·일용직, 또는 시간제(part-time)와 같은 비정형 근로를 희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56) 이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금재호(2000)를 참조할 수 있다.

	1998	1999
구직기간		
6개월 미만	96.6( 73.9)	104.6( 68.7)
6개월 ~ 1년 미만	100.4( 49.0)	108.5( 70.6)
1년 이상	102.1( 61.5)	107.1( 45.2)
희망 산업		
제조업(광업 포함)	100.8( 55.6)	106.2( 55.3)
건설업	121.8( 46.2)	120.9( 54.9)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95.9( 59.5)	106.5( 65.3)
전기, 운수 및 금융업	125.9( 97.0)	126.5( 43.1)
부동산 임대·서비스업	91.1( 44.3)	92.0( 42.0)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88.1( 80.9)	94.2( 90.5)
희망 직종		
전문직 및 관리직	147.9(148.3)	126.2(109.4)
준전문직	91.9( 51.8)	133.9( 58.4)
사무직	87.1( 53.3)	85.1( 36.3)
서비스·판매직	88.8( 56.6)	109.4( 75.2)
기능 및 기계조작·조립직	115.5( 55.2)	115.1( 53.3)
단순근로	90.5( 75.9)	73.9( 30.9)
희망 고용형태		
정규직 임금근로	97.2( 56.4)	100.1( 43.9)
비정규직 임금근로	74.6( 41.4)	64.6( 36.5)
비임금근로	164.2(109.1)	188.6( 97.4)

주:( )안은 표준편차 값임.

## 나. 희망임금의 결정요인

희망임금에 대한 계량분석은 Kiefer and Neumann(1976)의 의중임금 방정식을 사용하도록 하며, 여기에서 종속변수는 희망임금의 자연대수 값이고 설명변수로는 <표 IV-16>과 같이 성(sex), 연령(age), 연령의 제곱(age square), 교육기간(education period), 가구주 여부(family head) 등의 인구학적 변수와 구직기간(search duration), 전 직장의 자발적 이직여부, 전 직장에서의 월평균 소득, 전 직장의 고용형태, 희망직장의 고용형태, 희망직종의 전문직 또는 준전문직 여부, 희망직종의 기능직 또는 기계조작·조립직 여부, 희망산업의 건설업 여부 등의 경제적 변수를 사용하였다.<sup>57)</sup> 오차항이 i.i.d. 분포를 한다는 가정 아래 희망임금의 식을 추정한 결과 교육기간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을 뿐

<표 IV-16> 희망임금의 결정요인 추정: OLS<sup>58)</sup>

	추정치	표준편차(P> z )
상수항	2.3577	0.1117(0.000)
성별(1: 남성, 0: 여성)	0.2135	0.0265(0.000)
연령(세)	0.0409	0.0048(0.000)
연령의 제곱	-0.0005	0.0001(0.000)
교육기간(년)	0.0051	0.0036(0.162)
가구주 여부(1: 가구주)	0.1084	0.0303(0.000)
구직기간(개월)	0.0016	0.0009(0.072)
비자발적 이직여부(1: 비자발적)	-0.0552	0.0227(0.015)
전 직장의 월평균 소득(만원)	0.2403	0.0188(0.000)
전 직장의 고용형태(1: 정규직)	-0.0534	0.0233(0.022)
희망직장의 고용형태(1: 정규직)	0.1508	0.0256(0.000)
희망직종 전문직·준전문직(1: yes)	0.2233	0.0350(0.000)
희망직종 기능·조립직(1: yea)	0.0761	0.0266(0.004)
희망산업 건설업(1: yes)	0.1275	0.0326(0.000)
표본수	977	
F-value	82.3	
Adjusted R <sup>2</sup>	0.5198	

57) 전 직장의 고용형태가 임금근로인 경우만으로 제한하여 추정하였다.

58) 이 모형들은 설명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구조적 모형이 아니며, 따라서 해석상 주의 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모든 변수가 1~10%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기간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것은 희망직장의 산업과 직종을 나타내는 가변수들이 교육기간의 설명력을 잠식하였기 때문으로 이들 변수를 제외한 추정결과는 교육기간도 희망임금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기초분석 결과와 같이 남성이며 연령이 많을수록, 교육수준이 높고 가구주일 경우에 희망임금이 높아진다. 또한 전 직장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희망임금 수준도 높아지는 반면 전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던 실업자의 희망임금은 비정규직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추정되었다. 이는 기초분석에서 정규직 출신 실업자의 희망임금이 비정규직보다 높았던 것과 반대의 결과이다. 전 직장에서의 정규직 여부와 소득수준 사이의 높은 상관관계가 이러한 현상의 부분적 원인으로 여겨진다. 희망직장의 성격과 관련되어서는 전문직 또는 준전문 직종에의 취업을 원하는 실업자와 건설업 취업 희망자의 희망임금 수준이 높으며, 정규직 취업 희망자의 희망임금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구직기간과 희망임금은 정(+)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구직기간의 회귀계수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어수봉(1994) 및 금재호(2000, 1997)의 추정결과와 대비된다.

## V. 장기실업자의 재취업과 임금변화

### 1. 임금하락의 이론적 배경

노동경제이론은 직장상실자의 재취업 임금이 감소하는 원인에 관하여 다양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다. 그 첫 번째 이론으로 McLaughlin(1991)과 Jovanovic(1979)의 노사간 합치론(matching theory)을 들 수 있다. 즉 근속기간이 증가해 감에 따라 노사간의 효율적 합치의 가능성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임금도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때 불황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직장을 상실하고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게 된다면, 이전 직장에서의 합치 효율성(matching efficiency)은 없어져 임금손실이 초래된다는 것이다. 둘째는 Becker(1975)의 기업특수 인적자본론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근속기간이 길수록 기업특수적 인적자본량이 많아져서 직장상실시에 임금은 감소하게 된다는 일반경제논리이다. 셋째는 Lewis (1986)과 Stiglitz(1974)의 임금프리미엄(premium)과 연관된 이론이다. Lewis (1986)의 주장은 노조의 위협효과(threat effect)에 의해 임금프리미엄이 존재하며 직장을 상실하여 비노조부문으로 이직할 경우 이러한 임금프리미엄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다. 노조의 위협효과가 고참권 혹은 선임권을 중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근속기간이 긴 근로자일수록 임금프리미엄은 더 증가하게 될 것이다. 또한 Stiglitz(1974)의 효율성 임금가설에 의하면 고임금은 직장상실비용을 증대시켜 근로자에 대한 규율효과(disciplinary effect)를 가진다. 만일 근로자가 고임금을 누리는 직장에서 그렇지 않은 직장으로 이직(turnover)할 경우 이러한 임금프리미엄은 상실되게 될 것이다. 넷째는 Lazear (1979)의 장기계약하의 이연보상계약(delayed payment contracts)이론이다. 한 직장에서 이연임금을 사용하여 근속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근로자는 생산성이 임금을 초과하고 근속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근로자는 생산성이 임금보다 작은 경우를 설정하자. 이 경우 근속기간이 긴 근로자가 직장을 상실하고 새로운 장기계약에 임할 경우 임금은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직장상실비용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는 경제이론은 Neal(1995), Carrington(1993), Addison and Portugal(1989), Podgrusky and Swaim(1987) 등의 산업특수인적자본 논리를 찾을 수 있다.<sup>59)</sup> Addison and Portugal(1989)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전 직장에서의 근속기간과 이직 후 직장의 임금은 정(+)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이러한 상관관계는 위에 설

59) Neal(1995)은 전직의 근속기간이 현직임금에 미치는 효과를, 산업을 바꾸어 이직한 경우와 바꾸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검토하였으며, 산업특수적 숙련이 존재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마찬가지로 Carrington(1993), Addison and Portugal(1989), Podgrusky and Swaim(1987) 등은 해고된 이후 산업을 바꾸어 취업할 경우 더 큰 임금 감소폭을 경험한다고 분석한다. 국내 노동시장에서 류기철(1992, 1995)과 전병유(2000)는 산업특수인적자본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산업특수인적자본의 형성은 직장상실자가 동종산업 혹은 유사산업으로 이직할 유인을 제공할 것이다.

명된 합치이론, 기업특수인적자본이론, 효율성임금이론 및 이연보상계약이론에 의해서는 설명되지 않는 현상이다.<sup>60)</sup> 이러한 현상은 임금회귀식에서 전직의 근속기간이 산업특수인적자본을 반영하고, 동일산업 혹은 유사산업으로 이직할 경우 전직 근속기간이 현직 임금에 (+)의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실업기간이 이직 후의 임금에 미치는 효과에 관련된 연구들도 많이 제시된 바 있다. 가장 초기에 해당되는 연구로 Stigler(1962)와 Lippman and Mc Call(1976)을 들 수 있다. 그들은 근로자의 의중임금(reservation wage)이 고정되어있다는 가정 하에 구직활동기간(실업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직후 임금이 증가하는 직장탐색모형(job search model)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초기 연구들과는 반대로 이후의 연구들은 실업이 이직 후 임금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와 그 원인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Lazear(1976)와 Kiker and Roberts(1984)는 실업으로 인한 생애경력의 단절은 인적자본을 손상시키며 동시에 그것을 축적할 기회를 박탈하여 의중임금을 감소시킨다고 제안한다. 따라서 실업으로 인한 경력단절기간이 길수록 이직후 임금은 감소한다는 함의를 제공한다. 반면 Heckman and Borjas(1980)는 실업기간이 길수록 노동시장에서 오명효과(scarring or stigma effect)가 생성되어 의중임금과 제의임금이 동시에 감소한다는 실증분석결과를 제시한다.

## 2. 재취업과 임금상실

여기에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제1~3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실직기간이 재취업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1998년의 제1차 조사 당시의 미취업자와 1998년 조사시점에는 취업자였으나 이후 1999년 조사시점까지 비자발적으로 직장상실된 자를 대상으로 재취업에 따른 임금변화를 실증 분석한다.<sup>61)</sup> 분석대상의 표본으로는, 제3장의 불안전성 연구와 같이, 비자발적 이직자로 이직사유가 「직장의 파산, 폐업, 휴업」, 「정리해고」, 「명예퇴직」, 「계약기간 만료」 및 「일거리가 없어서」 등 사용자 측의 경영상 이유로 직장을 상실한 임금근로자로 제한한다. 기존 연구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직장을 상실한 임금근로자만을 분석대상으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 크게 세 가지의 이유를 들 수 있다. 첫 번째는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의 경우 그 귀책사유가 기본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어,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는 통상해고에 비하여 그 표본이 근로자의 능력 편의(ability bias)에 의해 덜 오염(contaminated)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둘째는 통상해고의 경우 근속기간과 직장경험 등의 변수에 측정오차(measurement error)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이다. 통상해고로 직장을 상실한 근로자의 경우 잦은 이직으로 인하여 실직기간이 노동시장에서의 일반적 경험(general experience)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셋째는 통상해고의 경우 재고용의 가능성이 높아, 이전 직장 근속

60) 단순 직업탐색모형에서는 직장상실자는 새로운 임금 분포 아래에서 직업탐색을 하여 노사간 합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전직장에서 임금을 상승시키는 유인들이 이직 후 직장에서는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단순한 형태로 설정된다.

61) 분석대상의 표본에 대해서는 최소 4개월에서 최대 59개월까지 직장이직 이후의 재취업 경로에 대해 추적 가능하였다.

기간의 설명력이 과대포장(overstate)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과대포장의 가능성을 재고용 편향(recall bias)으로 칭하고 가능한 사용자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표본들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하기 위해 통상해고와 계절적 요인에 의한 해고를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sup>62)</sup>

<표 V-1> 직장상실과 임금의 변화

(단위 : 만원, %)

	전 직장 임금	현 직장 임금	임금 변화액 (변화율)
전체	100.1	69.3	-30.8(-30.8)
성별			
여성	63.4	51.5	-11.9(-18.8)
남성	120.8	79.4	-41.4(-34.3)
연령대별			
15 ~ 19세	49.2	58.3	9.1( 18.5)
20 ~ 29세	86.3	69.9	-16.4(-19.0)
30 ~ 39세	105.7	74.3	-31.4(-29.7)
40 ~ 49세	107.5	71.8	-35.7(-33.2)
50 ~ 59세	106.7	65.8	-40.9(-38.3)
60세 이상	73.4	42.8	-30.6(-41.7)
학력별			
초등학교졸 이하	74.7	54.8	-19.9(-26.6)
중졸	94.8	61.8	-33.0(-34.8)
고졸	104.1	74.4	-29.7(-28.5)
전문대졸	90.8	70.8	-20.0(-22.0)
대졸 이상	179.2	107.0	-72.2(-40.3)
배우자 유무			
없음	78.1	60.0	-18.1(-23.2)
있음	110.4	73.6	-36.8(-33.4)
전 직장의 근속기간			
0- < 2년	85.2	67.8	-17.4(-20.4)
2- < 5년	96.7	62.3	-34.4(-35.6)
5- < 10년	120.4	81.9	-38.5(-32.0)
10- < 15년	127.6	83.2	-44.4(-34.8)
15년 이상	128.8	65.3	-63.5(-49.3)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직장상실로 인한 임금변화를 추정하는 것도 제약점이 있다. 즉 제1차 조사 당시 미취업자의 전 직장 정보는 응답자의 회고적(retrospective) 대답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이직한 시점이 조사시점에서 멀어질수록 제한된 기억(limited memory)으로 인한 측정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전 직장에 대하여 비교적 정확한 기억을 가지고 있을 1996년 이후의 직장상실자를 분석대상으로 한다.

직장상실자의 계층(cohort)별 분석을 통하여 직장상실자의 계층별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sup>63)</sup>

62) 우리 나라의 경우 통상해고도 재고용 가능성은 매우 낮아, 통상해고 표본을 분석에 포함시켜도 재고용 편향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63) 근로자 특성별로 평균 직장상실비용의 차이를 살펴보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즉 여타 조건은 동일하

비자발적 직장상실의 경우에 남성은 재취업을 통하여 임금이 120만 8천원에서 79만 4천원으로 34.3% 감소한 반면, 여성은 63만 4천원에서 51만 5천원으로 18.8% 감소하였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그림 V-1]과 같이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임금의 하락률이 더욱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는 임금이 19.0% 정도 하락하며, 30대는 29.7%, 40대 33.2%, 50대 38.3%, 그리고 60대는 무려 41.7%나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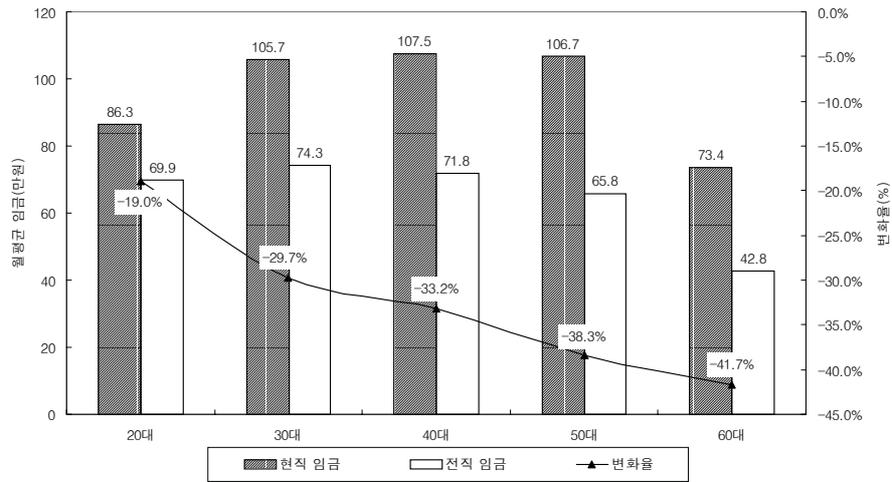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에서 임금 하락폭이 가장 크다. [그림 V-2]에서 대졸 이상의 학력을 지닌 비자발적 직장상실자는 전 직장에서 179만 2천원의 임금을 받았으나, 새 직장에서는 임금이 107만원 수준으로 떨어져 40.3%나 감소하였다. 또한 중졸 학력자도 34.8%의 높은 임금 하락률을 경험한 반면, 전문대졸 학력자는 22.0%, 고졸자는 28.5% 정도의 임금하락에 그치고 있었다. 배우자 유무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임금 손실폭이 컸으며, 전 직장의 근속기간에 따라서는 [그림 V-3]과 같이 근속기간 15년 이상의 장기근속자의 임금 하락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또한 총 취업경험기간에 따라서는 취업경험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계층에서 가장 커다란 임금 하락을 경험하였다.

실직기간의 장기화에 따라 임금 감소폭도 증가하는 형태를 보여, [그림 V-4]에서 실직기간이 3개월 미만일 때는 임금이 19.7% 하락하고, 3개월에서 6개월 미만이면 12.5%의 하락에 그치나, 실직기간 6개월이 지나면서 임금상실폭은 격하게 증가한다. 즉 6~9개월의 구직활동 이후에 취업한 직장상실자의 경우 임금은 33.1%나 하락하며, 9개월~1년 미만은 28.9%, 1~2년 미만 37.7%, 2~3년 미만 40.7%의 임금손실을 기록하게 된다.<sup>64)</sup> 임금상실의 폭은 실직기간 6개월을 기준으로 급증하지만, 비자발적 직장상실 이전 직장의 임금수준은 실직기간 6~9개월 미만에서 가장 높은 역U자의 형상을 보인다. 이는 임금이 높았던 직장상실자가 6개월 이상의 장기실직상태에 놓여 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또한 전 직장 임금이 의중임금(또는 희망임금)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할 때,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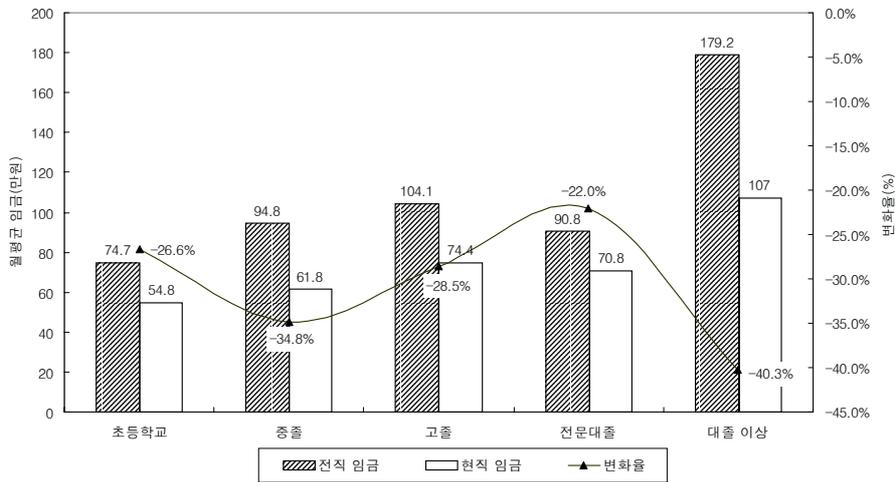
[그림 V-1] 연령대별 전·현직 임금과 변화율

다(ceteris paribus)는 가정이 단순 분석에서는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의 계층별 분석은 전반적인 계층별 차이에 대한 일반적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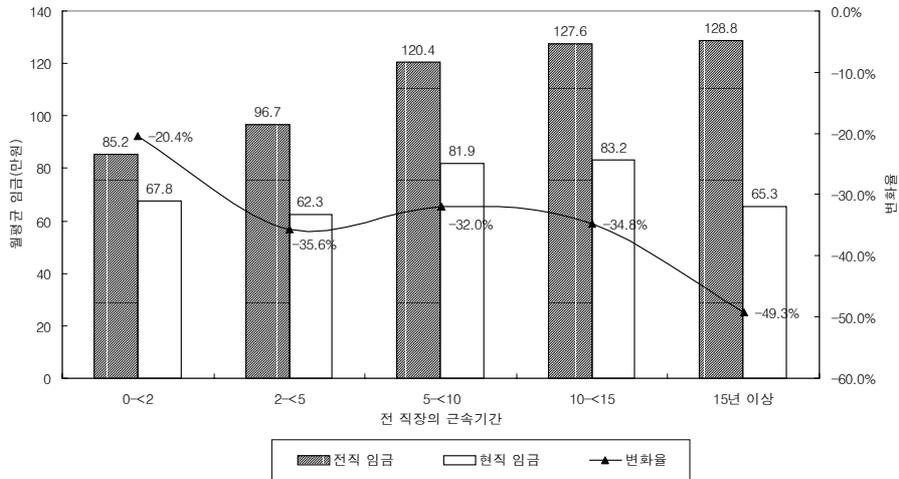
64) 실직기간이 3년 이상인 표본은 5명에 불과하여 보고에서 생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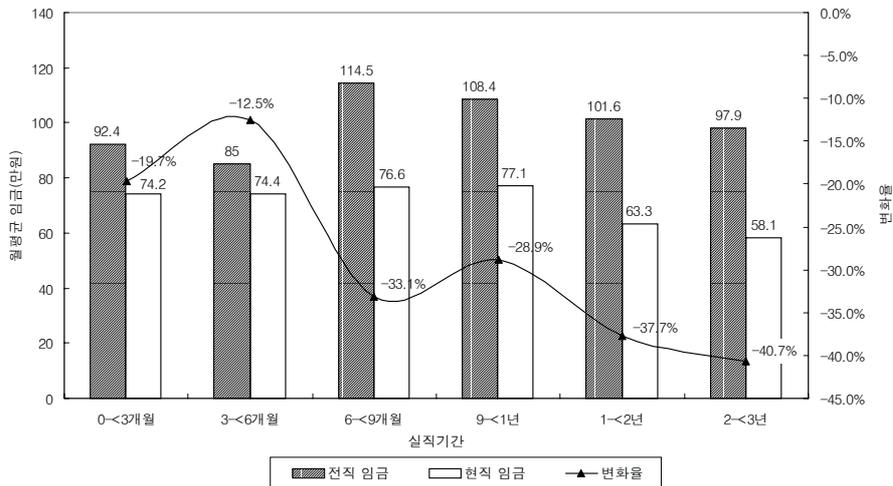
[그림 V-2] 학력별 전·현직 임금과 변화율



[그림 V-3] 전 직장의 근속기간별 전·현직 임금과 변화율



[그림 V-4] 실직기간별 전·현직 임금과 변화율



러한 사실은 구직기간이 장기화되어도 의증임금이 감소하지 않는 앞장의 의증임금 분석결과를 입증하고 있다. 새 직장의 임금수준도 실직기간의 증가에 따라 함께 늘어났다가 실직기간 9개월~1년 미만을 기점으로 다시 하락하는 역U자 형태를 보인다. 그러나 실직기간에 따른 현직장의 임금 변동폭은 전 직장의 임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실업기간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여기에서는 전 직장의 근속기간, 전 직장 근속기간의 제곱, 일반적 직장경험, 교육기간, 성별더미, 고용형태의 전환더미 및 실직기간을 설명변수로 하는 회귀분석 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통상최소자승법(OLS)으로 추정하였다. 새 직장의 임금함수를 OLS로 추정한 결과는 <표 V-2>에 나타나 있다.

추정결과는 전 직장의 근속년수가 장기간일수록,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재취업 직장에서의 임금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성일 경우 임금수준이 높아 성차별적 임금격차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을 경우는 회귀계수의 추정치가 정(+의 값을 보이거나 통계적 유의성이 없다. 따라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

로의 전환이 임금상승을 수반하기 어려운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임금이 18.8%나 하락하여 비정규직의 오명효과(stigma effect)가 존재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실직기간에 대해서 실직기간이 장기간일수록 새로 취업한 직장에서의 임금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실업의 장기화가 실업자의 의증임금을 낮추고, 경제적 지위를 하락시키는 부정적 효과의 가능성을 지지한다.

<표 V-2> 전 직장과 현 직장의 임금함수 추정:OLS

설명변수	현직 임금함수의 추정결과	
전 직장 근속기간(년)	0.01584	(0.066)
전 직장 근속기간의 제곱	-0.00077	(0.008)
총 직장경험(년)	-0.00341	(0.275)
교육기간(년)	0.03737	(0.000)
성별 (1: 남, 0: 여)	0.40322	(0.000)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 더미	0.10670	(0.216)
정규직에서 비정규직 전환 더미	-0.18816	(0.001)
실직기간의 자연대수 값	-0.06905	(0.010)
상수항	3.53111	(0.000)
표본수	433	
F-value	19.79	
Adjusted R2	0.2582	

주:( )안은 P(>|z|)값임.

## VI. 결론 및 정책과제

본 연구에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원자료와 한국노동패널조사를 분석하여 장기실업자의 구조변화 및 특성을 분석하였다. 먼저 제II장에서는 1993년 12월 이후 2000년 9월까지의 기간 동안 장기실업자의 특성 및 그 변화를 살펴본 결과 외환위기를 전후로 장기실업자의 구조에 커다란 변화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먼저 장기실업자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1993년 12월에서 1997년 12월까지의 4년 동안 남성이며,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로 20대의 젊은 계층이고, 가구주의 미혼자녀인 장기실업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고용사정이 좋았던 이 시기에는 기본적인 생계를 부모, 친지가 책임지는 계층에서 장기실업자가 많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외환위기로 실업이 급증하고 심각한 구직난이 발생하자 장기실업자의 특성도 변화하였다. 장기실업자에서 남성의 비중이 70~80%에 달하는 것은 전과 동일하나 학력별로 중졸 이하의 저학력층에서, 연령대별로 30대 이상에서, 그리고 가구주와의 관계에서 가구주 또는 배우자인 장기실업자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둘째, 취업경험이 있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전직의 특성에 따른 장기실업자의 비중변화를 살펴본 결과, 외환위기 이후 비자발적 실직자 비중의 급증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전직의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시·일용직 출신 장기실업자의 비중이 증가하였고, 산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 종사자들이, 그리고 직종별로는 기능조작(기능직, 기계조작 및 조립, 단순근로)에서 장기실업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셋째, 어떤 계층에서 장기실업에 빠질 위험성이 높은가의 질문에 대해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장기실업의 위험성이 높으며, 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장기실업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외환위기 전후 모두 발견된다. 연령대별로는 외환위기 이전 뚜렷한 특징을 찾아볼 수 없었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40·50대의 중·장년층에서 장기실업 상태에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주와의 관계는 외환위기 이전에는 미혼자녀가 장기실업의 위험성이 높았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가구주의 위험성이 높았다.

넷째, 외환위기 이전에는 자발적 실업자가 장기실업에 빠질 위험성이 높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비자발적 실업자에서 장기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전 직장의 종사상 지위에 따라서는 외환위기 이전 자영업 실업자에서 장기실업이 많았으나 외환위기로 인해 상용직 실업자 중 장기실업자의 비중이 높았던 현상이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외환위기 직후부터 1999년 6월까지 제조업(광공업)에 종사하던 실업자 중 장기실업자 비중이 높았다. 또한 직업별로 장기실업에 놓일 위험성은 전문기술직과 사무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다섯째, 1999년 중반 이후 외환위기로 인한 변화된 장기실업자의 구조에도 새로운 변화가

발생하여 점차 실업자 특성별 차이가 완화되거나 모호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변화가 노동시장이 외환위기의 충격을 극복하여 외환위기 이전의 상태로 회귀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 변화를 반영하는지의 여부는 보다 깊은 분석과 자료를 요구한다.

제Ⅲ장에서는 생계유지의 방법, 소득과 지출, 생활만족도 등 실업자 및 실업가구의 경제생활에 대해 분석하였다. 먼저, 실업자의 대부분은 ‘가족 및 친지 보조’, ‘배우자 소득’, ‘저축’ 등에 생계를 의존하여 생계유지가 사회적 보호나 지원이 아닌 개인적 책임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둘째, 실업가구의 생계유지방법에서 나타난 하나의 특징은 ‘빚’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특히 실업의 장기화에 따라 ‘배우자 소득’과 ‘빚’에 대한 생계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었다. 6개월 미만의 실업자는 9.8%만이 ‘빚’으로 생활하고 있었으나 6개월에서 1년 미만의 실업자는 18.5%가, 1년 이상 실업자는 15.1%가 생계를 ‘빚’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는 장기 실업자의 빈곤문제가 상당한 규모로 존재할 가능성과 함께, 실업의 결과 빈곤상태에 빠질 위험도가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셋째, 동일한 실업가구라고 할지라도 다른 가구원이 취업하고 있는지에 따라 실업가구의 소득은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장기실업자군내에서도 다른 가구원의 취업여부에 따라 상당한 규모의 소득격차가 발견된다. 취업자가 없는 순수실업가구로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가구의 총소득은 월평균 48만 9천원에 지나지 않아 절대빈곤의 상태에 놓여있으며, 이들 가구의 가구원 1인당 총소득도 17만 5천원으로 다른 실업가구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취업자가 있는 실업가구는 가구원 중 6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자가 있더라도 가구의 총소득이 월평균 135만 4천원에 달하며, 1인당 총소득도 34만원으로 기본적인 생계유지가 가능한 정도의 소득을 얻고 있었다.

넷째, 6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자가 있을 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 가구 내 취업자의 여부와 상관없이 장기실업자가 있는 경우에 경제적 곤란을 느끼는 가구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순수 실업가구이면서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가 있는 가구의 95.2%가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여 장기 실업가구의 경제적 위기를 대변한다. 구체적으로 취업자 없는 순수 실업가구와 이 중에서도 6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자 가구에서 식비조달이 어렵다는 비중이 다른 실업가구보다 크게 높다. 또한 순수 실업가구와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가구의 상당수는 관리비, 월세 등 ‘주거비’의 지출에도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다섯째, 실업기간의 장기화에 따라 생활전반 및 가족관계에 대해 불만족을 호소하는 실업자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1998년의 경우 구직기간 6개월 미만인 실업자의 47.1%가 생활이 ‘불만족스럽다’ 또는 ‘매우 불만족스럽다’라고 응답한 반면, 구직기간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실업자는 56.6%가 ‘불만족스럽다’ 또는 ‘매우 불만족스럽다’라고 대답하였다. 또한 실업의 장기화가 가족관계를 악화시키고 더 나아가 가족붕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제Ⅳ장에서는 구직활동 및 희망임금에 대해 논의하였다. 먼저 실업기간의 장기화는 직종 전환 욕구에 영향을 미쳐 다른 직종에의 재취업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아진다. 희망하는 고용형태에 따라서는 장기실업자의 경우 정규직 임금근로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추정결과는 실업의 장기화에 따라 정규직 임금근로를 희망하는 성향이 점점 높아져 간다는 점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 희망자의 장기실업 위험도가 높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둘째, 실업기간과 구직활동 강도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실업기간의 장기화에 따라 구직방법의 수 또는 구직활동시간이 증가할 것이라는 가정의 증거를 발견하는 데 실패하였다.

셋째, 희망임금도 구직기간 6개월 미만의 실업자보다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의 희망임금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희망임금이 높은 근로자가 장기간 실업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실업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개인 근로자의 희망임금 수준은 하락하지만 이들의 희망임금 수준 자체가 처음부터 높았기 때문에 회귀분석에서 구직기간과 희망임금 사이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거나 또는 희망임금이 도리어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나라에서 장기실업자의 상당수는 가구 내 다른 가구원이 취업하고 있어 생계유지의 어려움이 크지 않으며, 희망임금이 높은 계층일 것이라는 논의를 지지한다.

제V장에서는 직장상실자의 재취업에 따른 임금변화를 통해 외환위기가 고용의 질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직장상실자의 대부분은 재취업으로 큰 폭의 임금하락을 경험하였으며, 특히 연령에 따라 임금하락 규모가 더욱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직기간의 장기화에 따라 임금하락폭도 증가하는 형태를 보여 실직기간 6개월을 지나면서 임금하락폭은 급증한다. 6~9개월의 구직활동 이후에 취업한 직장상실자의 경우 임금은 33.1% 하락하며, 9개월~1년 미만은 28.9%, 1~2년 미만 37.7%, 2~3년 미만 40.7%의 임금손실을 기록하였다. 실직기간의 right-censoring 문제와 실직기간과 현 직장 임금 사이의 연립성을 감안한 연립방정식의 추정 결과에서도 실직기간의 임금탄력도가 -4.637로 나타나 장기실직에 따른 임금상실의 규모가 상당함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우리 나라의 장기실업자의 특성이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크게 변화하였으며, 장기실업자는 생계유지도 어려운 빈곤계층과 기본적 생계유지는 가능한 계층의 둘로 구분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장기실업자의 구성비가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변화한 것은 외환위기로 인해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의 저학력 계층, 연령별로는 30대 이상에서, 가구주와의 관계에서는 가구주 또는 배우자, 이직사유에 따라서는 비자발적 직장상실, 전직장의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시·일용직, 전 직장의 산업은 제조업 및 건설업, 전 직장의 직종은 기능, 기계조작·조립, 단순근로에서 실업자가 대량으로 발생한 점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실업자와 장기실업자와의 차별성을 발견할 수 없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장기실업의 위험은 성별로 남성, 학력에 따라서는 고학력자, 연령대별로는 40·50대의 중·장년층, 가구주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가구주, 이직사유로는 비자발적 이직자, 전직의 종사상 지위로는 상용직, 직종별로는 전문기술직과 사무직에서 위험성이 높아졌다는 점은 이들 계층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들에 대한 지원은 장기실업자 가구의 다른 가구원이 취업하고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달

라져야 할 것이다.

다른 가구원이 취업하여 기본적인 생계유지가 가능하다면 취업알선, 진로지도, 심리상담 등에 지원의 초점을 맞추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적합한 일자리를 찾거나 또는 자신의 기대수준을 낮추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이들 장기실업자들은 자신의 생애기대소득을 극대화하기 위한 자기선택의 결과로 장기간의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이들로 여겨진다. 이러한 점은 장기실업자의 구직활동 강도가 다른 실업자보다 강하지 않고, 이들의 희망임금 수준이 낮지 않다는 제4장의 분석결과에서도 간접적으로 보여진다. 반대로 생계유지 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면 생산적 복지의 개념아래 생계지원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직업훈련, 고용안정서비스 등의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일반 실업자에 대한 지원과 차별적인 지원정책 개발의 필요성은 크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장기실업자의 발생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실업자 프로파일링(worker's profiling) 제도의 적극적 활용이 요구된다.

실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 등 각종 정부의 지원정책이 대부분의 장기실업자에게 도달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정보인프라를 개선·확대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인 것으로 여겨진다. 외환위기 이후 장기실업자 중 30대 이상 연령층의 비중이 증가하였음을 앞서 논의하였다. 그러나 공공직업안정기관을 이용하는 실업자 중에서 30·40대 연령층이 비중은 매우 적은 형편이며, 50·60대가 일부 공공직업안정기관을 방문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공공근로사업 등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30대 이상 실업자들이 공공직업안정기관을 방문하도록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장기실업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 단계일 것이다. 이러한 점은 외국의 경우 실업자의 30% 이상이 공공직업안정기관을 방문하나 우리 나라는 그 비중이 2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다는 점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지난 3년 동안의 정책개발의 결과 장기실업자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 정책의 틀은 거의 갖추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앞으로 남은 문제는 장기실업자 또는 장기실업의 가능성이 높은 계층에 얼마만큼 접근할 수 있는가의 과제이다. 즉 이들을 파악하고 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노동시장 인프라의 구축이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아직도 실업자의 대부분이 실업급여 등 사회적 통로가 아니라 개인적 통로를 통해 생계유지를 하고 있다는 제3장의 분석결과는 새로운 제도의 개발이 아니라 기존 제도를 모든 실업자 및 근로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의 적용문제가 중요함을 암시하는 하나의 예로 여겨진다.

## 참고문헌

- 강순희, 『노동시장 동향과 전망』, 한국노동연구원, 2000.
- 김재호, 『도시근로자의 실업실태와 정책방안』, 한국노동연구원, 1997.
- \_\_\_\_\_, 「노동시장 구조변화와 정책과제」, 『고용보험 시행 5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한국노동연구원, 2000.
- \_\_\_\_\_, 『직업, 취업 및 훈련정보에 대한 수요자 욕구조사』, 노동부, 1999.
- 류기철, 『취업형태의 지속성에 관한 연구』, 제2차 한국노동패널학술대회 발표집 (2000): 135-153.
- \_\_\_\_\_, 『Effects of Industry-Specific Human Capital on Wages and Productivity』, 노동경제논집, 제19권 1호 (1995): 247-272.
- 어수봉, 『한국의 실업구조와 신인력정책』, 한국노동연구원, 1994.
- 전병유, 『산업특수적 숙련과 임금』, 제2회 한국노동패널학술대회 발표집 (2000): 321-340.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통계청, 각년도 및 매월 보도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한국노동연구원 패널팀, 각년도.
- \_\_\_\_\_, 『분기별 노동동향분석』, 한국노동연구원, 2000. 1/4.
- 한국노동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실업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결과보고서』, 노동부, 1999.
- Addison, John T. and Portugal, Pedro, "Job Displacement, Relative Wage Changes, and Duration of Unemployment", *Journal of Labor Economics*, Vol. 7 (1989): 281-302.
- Becker, Gary S., *Human Capital*, 2nd Ed., New York: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1975.
- Blau, D. M., and Robins, P. K., "Job-Search Outcomes for the Employed and Unemployed", mimeo, Univ. of North Carolina - Chapel Hill, 1989.
- Blau, D. M., and Stern, S., "Estimating the Choice of Search Methods Using Economic Necessary First Order Conditions", mimeo, Univ. of North Carolina, 1988.
- Bradshaw, T. F., "Jobseeking Methods Used by Unemployed Workers", *Monthly Labor Review* (1973): 35-40
- Campbell, K., and Marsden, P., "Recruitment and Selection Processes: The Organizational Side of Job Searchers", in R. Breiger, Ed., *Social Mobility and Social Structur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 Carrington, William, "Wage Losses for Displaced Workers: Is It Really the Firm That

- Matters?", *Journal of Human Resources*, Vol. 28 (1993): 483-496.
- Heckman, James J., and George J. Borjas, "Does Unemployment Cause Future Unemployment? Definition, Questions and Answers from a Continuous Time Model of Heterogeneity and State Dependence", *Econometrica*, Vol. 47 (1980): 39-77.
- Holzer, Harry J., "Search Method Used by Unemployed Youth", *Journal of Labor Economics*, Vol. 6 (1988): 1-20.
- \_\_\_\_\_, "Informal Job Search and Black Youth Unemploy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77 (1987): 446-452.
- Jovanovic, Boyan, "Job Matching and the Theory of Turnover",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87 (1979): 972-990.
- Keum, Jaeho, "Dynamic Search of Non-Employed Individuals", Ph. D. Thesis, University of Minnesota, 1992.
- Kiefer, Nicholas M., and Neumann, George R., "An Empirical Job Search Model with a Test of the Constant Reservation Wage Hypothesi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87 (1979): 69-82.
- Kiker, B. F., and Roberts, R. Blaine, "The Durability of Human Capital: Some New Evidence", *Economic Inquiry*, Vol. 22, 269-281.
- Lazear, Edward P., "Age, Experience, and Wage Growth,"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66 (1976): 548-558.
- \_\_\_\_\_. "Why is there Mandatory Retiremen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87 (1979): 1261-1284.
- Lee, Albert, "Information Networks in Labor Market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56 (1969): 556-566.
- Lewis, H. Gregg, "Union Relative Wage Effects: A Surve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6.
- Lippman, Steven A., and McCall, John J., "The Economics of Job Search: A Survey, Part 1", *Economic Inquiry*, Vol. 14 (1976): 155-189.
- McLaughlin, Kenneth J., "A Theory of Quits and Layoffs with Efficient Turnover",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99 (1999): 1-29.
- Mortensen, D. T., and Vishwanath Tara, "Information Sources and Equilibrium Wage Outcomes", mimeo, Northwestern University, 1990.
- Neal, Dereck, "Industry-Specific Human Capital: Evidence from Displaced Workers", *Journal of Labor Economics*, Vol. 13 (1995): 653-677.
- Podgrusky, Michael, and Paul Swaim, "Job Displacement and Earnings Loss: Evidence from the Displaced Worker Survey",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Vol. 41 (1991): 17-29.
- Stigler, George J., "Information in the Labor Marke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70

(1962): 94-105.

Stiglitz, Joseph E., "Alternative Theories of Wage Determination and Unemployment in LDCs: The Labor Turnover Model",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88 (1974): 194-227.

Wolpin, Kenneth I., "An Estimable Dynamic Stochastic Model of Fertility and Child Mortalit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92 (1984): 852-874.

\_\_\_\_\_, "Estimating a Structural Search Model: The Transition from School to Work", *Econometrica*, Vol. 55 (1987): 801-818.

## 부 표

&lt;부표 1&gt; 장기실업자의 특성별 분포: 성별, 학력별

	성 별		학력별				
	남 성	여 성	초등졸 이하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이상
1993년 12월	74.37	25.63	4.3	9.2	42.7	11.6	32.1
1994년 3월	76.77	23.23	4.7	10.8	43.6	9.8	31.1
6월	76.63	23.37	5.9	12.2	38.8	8.8	34.3
9월	73.34	26.66	4.8	10.2	41.5	11.9	31.6
12월	75.52	24.48	5.6	9.1	42.6	14.7	28.1
1995년 3월	78.30	21.70	7.2	11.3	44.3	14.2	23.1
6월	67.52	32.48	7.3	14.3	41.4	12.4	24.6
9월	67.24	32.76	5.0	12.5	46.2	16.8	19.6
12월	70.01	29.99	6.6	10.4	46.5	16.7	19.8
1996년 3월	76.81	23.19	10.0	6.6	43.6	16.6	23.2
6월	78.95	21.05	6.7	6.4	42.9	16.6	27.4
9월	76.33	23.67	3.4	8.1	45.1	15.9	27.6
12월	80.27	19.73	3.2	11.5	44.3	17.5	23.4
1997년 3월	84.91	15.09	6.6	11.2	46.1	14.4	21.7
6월	77.08	22.92	2.8	10.7	42.2	14.4	29.9
9월	71.24	28.76	3.6	12.0	47.7	14.1	22.6
12월	71.24	28.76	4.5	9.7	51.7	13.9	20.2
1998년 3월	76.80	23.20	6.1	12.1	44.6	15.2	22.0
6월	77.29	22.71	5.3	16.9	43.8	11.0	23.0
9월	75.21	24.79	9.3	14.6	47.9	11.4	16.8
12월	77.12	22.88	10.2	14.3	48.1	11.4	16.0
1999년 3월	75.63	24.37	7.2	15.1	50.8	11.0	15.9
6월	75.78	24.22	9.8	12.5	47.4	14.4	15.9
9월	75.06	24.94	9.6	15.7	44.4	14.1	16.2
12월	80.36	19.64	10.7	13.9	46.9	14.8	13.7
2000년 3월	80.13	19.87	7.1	13.8	48.8	12.4	18.0
6월	74.70	25.30	5.6	14.6	47.1	19.0	13.6
9월	79.14	20.86	10.8	14.4	36.8	20.8	17.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및 매월 자료.

&lt;부표 2&gt; 장기실업자의 특성별 분포: 연령대별, 가구주와의 관계

	연령대별						가구주와의 관계			
	15~19	20~29	30~39	40~49	50~59	60세이상	가구주	배우자	미혼자녀	기타
1993년 12월	7.8	61.5	15.2	10.2	5.4	0.0	28.2	5.6	51.7	14.5
1994년 3월	5.6	57.9	18.5	10.0	6.8	1.1	35.6	6.1	43.9	14.4
6월	2.8	62.4	18.1	12.5	3.8	0.4	27.4	6.1	48.4	18.1
9월	6.6	56.5	19.3	13.2	3.6	0.9	29.1	9.1	49.6	12.2
12월	6.6	57.7	18.7	12.6	4.0	0.5	29.5	5.6	52.7	12.1
1995년 3월	7.0	46.1	24.7	16.3	5.4	0.5	33.3	8.7	43.6	14.4
6월	3.5	48.7	23.8	9.2	10.5	4.3	33.3	8.2	37.8	20.7
9월	6.7	51.2	20.5	11.5	10.1	0.0	32.6	9.3	45.3	12.7
12월	7.6	49.8	17.8	15.6	8.0	1.1	32.6	9.7	43.4	14.2
1996년 3월	6.3	43.2	18.5	14.7	15.5	1.9	39.7	8.1	42.4	9.8
6월	3.2	47.3	19.6	17.1	10.2	2.6	35.6	11.9	37.9	14.6
9월	5.1	55.5	20.9	11.6	4.9	1.9	28.8	8.6	44.0	18.6
12월	3.5	58.3	15.7	15.8	5.6	1.1	30.5	5.3	44.2	20.0
1997년 3월	1.0	44.6	24.8	17.1	10.7	1.7	34.9	5.0	30.6	29.5
6월	2.7	53.5	19.5	15.7	5.9	2.7	32.0	8.2	44.3	15.5
9월	6.4	47.6	21.6	13.7	8.4	2.5	29.1	13.6	44.7	12.6
12월	7.3	50.2	17.5	13.3	9.0	2.8	31.1	10.2	44.5	14.2
1998년 3월	3.5	50.7	19.5	15.2	8.2	3.0	38.9	4.8	48.3	8.0
6월	3.4	41.1	25.6	15.5	10.8	3.7	44.1	9.8	36.1	10.1
9월	3.4	35.0	27.1	19.1	13.2	2.2	48.7	12.5	27.9	10.9
12월	2.2	32.2	25.5	22.2	15.6	2.3	51.5	12.3	26.2	10.0
1999년 3월	2.8	28.8	28.0	23.9	15.0	1.4	48.6	14.6	27.1	9.7
6월	2.9	27.7	28.9	23.6	14.5	2.4	48.5	12.5	29.4	9.6
9월	3.1	28.6	23.1	23.9	17.0	4.4	47.3	16.2	28.3	8.2
12월	1.2	29.9	22.5	25.8	15.0	5.5	48.5	13.3	29.6	8.5
2000년 3월	3.6	24.1	28.6	26.9	12.6	4.1	45.9	18.3	27.1	8.8
6월	0.9	30.6	23.5	32.8	11.1	1.2	42.2	18.6	28.7	10.6
9월	0.5	22.3	29.0	29.6	16.9	1.7	43.3	18.5	25.0	13.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및 매월 자료.

&lt;부표 3&gt; 전직경험 장기실업자의 이직사유와 종사상 지위

	이직사유			종사상 지위			
	정리해고	정년퇴직	기타	상용직	임시·일용	자영업	무급종사
1993년 12월	18.9	0.0	81.1	33.1	40.2	26.0	0.7
1994년 3월	19.4	1.5	79.1	29.7	41.9	28.4	0.0
6월	11.7	0.0	88.3	35.0	43.0	20.8	1.2
9월	7.0	0.0	93.0	35.0	39.1	23.7	2.2
12월	8.7	0.0	91.3	27.8	43.4	27.0	1.7
1995년 3월	11.3	0.0	88.7	33.1	43.9	22.3	0.7
6월	10.3	2.5	87.2	27.2	51.5	21.3	0.0
9월	9.0	0.0	91.0	32.0	44.6	23.4	0.0
12월	8.2	0.8	91.1	27.4	50.8	19.5	2.3
1996년 3월	9.1	0.0	90.9	30.7	41.4	27.3	0.7
6월	22.8	0.0	77.2	25.3	48.8	25.8	0.0
9월	11.5	3.5	85.0	29.1	51.0	19.9	0.0
12월	10.0	0.0	90.0	26.5	49.3	22.2	2.0
1997년 3월	15.2	0.0	84.8	28.2	43.3	27.3	1.2
6월	10.0	1.4	88.6	28.1	44.0	26.6	1.3
9월	17.4	0.8	81.8	16.6	58.2	25.2	0.0
12월	13.5	0.0	86.5	19.5	62.7	17.1	0.7
1998년 3월	31.4	0.6	68.0	26.9	56.7	16.4	0.0
6월	37.9	1.3	60.9	28.8	52.0	18.8	0.4
9월	41.2	0.4	58.3	31.2	50.5	17.8	0.4
12월	40.5	0.4	59.1	28.9	52.0	18.7	0.4
1999년 3월	41.3	0.4	58.3	26.7	60.5	12.3	0.5
6월	27.9	0.9	71.2	24.8	56.4	18.0	0.8
9월	18.8	2.5	78.6	22.4	57.0	19.5	1.1
12월	26.5	2.7	70.8	30.0	54.7	13.5	1.7
2000년 3월	20.7	1.5	77.7	26.4	54.8	17.1	1.7
6월	17.5	0.5	82.0	17.8	64.5	16.6	1.0
9월	14.0	1.9	84.1	16.6	56.8	21.1	5.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및 매월 자료.

&lt;부표 4&gt; 전직경험 장기실업자의 산업과 직업

	산 업					직 업			
	광공업	건설업	도소매음식	전기운송	사업개인	전문기술	사무직	서비스판매	기능조작
1993년 12월	37.4	14.0	28.4	6.4	12.4	20.0	22.1	20.4	36.1
1994년 3월	27.8	9.6	37.8	6.5	17.1	21.5	14.7	29.5	32.9
6월	26.2	15.6	28.5	8.6	19.8	17.1	5.7	29.0	48.3
9월	31.4	9.9	37.2	9.1	11.4	14.4	17.5	31.8	36.3
12월	38.7	10.3	30.5	8.7	10.0	14.1	19.2	25.2	39.8
1995년 3월	27.3	7.7	35.8	19.6	9.6	12.8	8.6	24.4	54.2
6월	13.7	5.6	41.2	20.4	19.1	16.1	12.4	30.0	41.4
9월	22.0	9.2	38.2	12.9	17.7	11.6	26.0	25.5	36.9
12월	21.2	16.7	40.5	4.4	17.1	12.4	19.4	36.4	31.8
1996년 3월	26.9	18.2	36.9	5.7	12.3	16.4	20.5	26.3	36.8
6월	18.1	21.0	44.9	9.0	5.2	4.1	20.0	34.0	40.1
9월	25.8	20.3	34.1	3.6	13.2	8.4	19.0	32.7	36.9
12월	30.3	9.6	41.9	3.1	15.1	24.9	14.5	28.4	32.3
1997년 3월	18.7	17.9	42.8	1.4	18.4	12.7	10.8	30.9	45.6
6월	28.9	7.5	29.5	10.4	21.2	10.6	13.0	29.7	45.2
9월	21.1	12.5	37.2	9.2	18.3	16.4	9.9	29.2	42.8
12월	21.9	16.7	38.1	7.9	14.1	18.1	11.6	27.2	41.9
1998년 3월	29.6	12.5	37.1	7.2	12.5	17.5	11.2	27.9	42.4
6월	28.4	17.6	30.3	6.0	16.6	19.0	10.6	24.4	45.4
9월	27.8	21.9	28.8	8.5	12.6	17.1	11.8	20.6	50.2
12월	28.7	22.9	27.8	8.8	11.0	15.5	9.5	21.1	53.2
1999년 3월	26.5	22.3	30.3	7.9	11.6	11.7	12.1	21.2	53.8
6월	17.8	18.2	34.4	12.3	16.8	14.4	17.2	21.5	46.6
9월	15.5	15.2	37.2	10.3	20.6	13.1	11.9	30.0	44.3
12월	20.3	16.3	27.9	6.5	27.6	18.0	13.9	20.4	46.9
2000년 3월	18.8	18.9	25.8	5.2	29.7	16.3	12.6	22.0	48.5
6월	18.9	11.9	31.3	6.3	27.8	14.8	18.3	19.2	47.4
9월	17.8	6.8	35.8	10.7	27.3	15.1	13.5	20.1	50.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및 매월 자료.

&lt;부표 5&gt; 실업자 중 장기실업자의 비중: 성별, 학력별

	성 별		학 력 별				
	남성	여성	초등졸 이하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이상
1993년 12월	25.4	19.8	15.7	14.9	22.0	18.1	43.5
1994년 3월	22.1	13.6	13.4	18.2	17.3	13.6	31.5
6월	23.6	13.9	16.5	19.5	15.8	14.9	38.1
9월	24.8	20.6	14.7	15.8	20.8	22.6	41.8
12월	21.6	16.0	21.2	12.3	17.7	17.7	35.4
1995년 3월	19.5	10.0	18.3	13.7	15.2	14.8	20.8
6월	16.9	13.9	14.6	15.8	13.8	14.0	23.6
9월	17.3	16.9	9.3	20.7	15.0	21.2	24.1
12월	21.7	18.9	19.8	16.7	20.0	18.0	31.9
1996년 3월	16.8	10.2	17.2	7.7	13.3	15.8	21.4
6월	17.7	10.6	14.1	8.9	13.5	18.1	23.9
9월	19.6	15.2	11.8	11.2	16.4	20.4	30.1
12월	19.1	8.6	10.0	13.8	13.5	13.3	31.0
1997년 3월	12.5	4.0	7.2	6.9	9.1	10.0	14.6
6월	16.4	8.6	6.8	10.5	12.3	12.4	22.3
9월	26.2	18.7	11.6	22.3	22.6	22.2	33.6
12월	20.8	14.8	10.2	12.2	19.9	15.5	31.0
1998년 3월	7.4	4.8	3.7	4.7	6.0	9.2	10.9
6월	14.5	8.8	5.8	13.1	11.7	11.8	22.2
9월	24.2	16.9	18.5	18.2	22.2	21.2	29.2
12월	22.3	12.5	17.5	15.7	19.5	14.1	30.1
1999년 3월	22.3	12.5	17.5	15.7	19.5	14.1	30.1
6월	19.9	13.1	10.9	16.8	18.8	15.6	23.0
9월	23.5	15.3	19.1	17.1	20.5	23.9	24.6
12월	18.4	9.1	15.9	13.0	16.3	12.9	17.8
2000년 3월	17.3	7.5	7.7	12.9	14.4	12.0	20.1
6월	16.4	11.8	7.2	14.6	14.9	20.3	16.8
9월	17.2	9.2	13.9	12.0	12.1	19.4	21.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및 매월 자료.

&lt;부표 6&gt; 실업자 중 장기실업자의 비중: 연령대별, 가구주와의 관계

	연령대별						가구주와의 관계			
	15~19	20~29	30~39	40~49	50~59	60세이상	가구주	배우자	미혼자녀	기타
1993년 12월	18.4	26.0	19.2	26.6	25.0	0.0	19.9	20.1	28.7	20.1
1994년 3월	10.8	20.0	19.8	19.2	29.0	15.9	20.7	15.3	19.8	17.3
6월	6.0	22.8	19.5	23.3	16.3	10.6	15.5	16.4	22.9	26.5
9월	18.2	26.0	19.0	27.6	21.2	17.1	18.2	22.8	30.9	18.8
12월	14.7	21.0	18.4	24.4	16.5	6.7	16.8	13.5	24.7	16.6
1995년 3월	10.7	14.2	21.8	22.9	14.3	7.3	15.4	20.8	15.8	17.0
6월	7.2	15.0	18.7	12.4	24.8	28.8	14.2	12.3	15.4	24.0
9월	14.6	18.3	14.8	17.2	26.1	0.0	14.9	14.8	20.1	17.1
12월	17.0	19.1	21.6	28.4	24.8	16.0	20.2	22.6	20.2	23.0
1996년 3월	9.2	12.2	14.5	17.4	37.4	16.7	16.9	12.1	14.0	12.2
6월	8.3	13.6	16.2	20.4	24.7	21.1	15.4	18.9	15.1	14.8
9월	14.5	19.5	17.3	19.6	14.8	17.6	14.3	19.0	20.7	21.8
12월	5.8	16.3	13.6	22.3	14.7	12.2	15.3	8.4	15.9	18.1
1997년 3월	1.5	9.4	10.2	10.5	13.7	5.8	9.3	2.9	8.5	19.3
6월	4.3	15.2	13.4	15.6	10.4	14.4	12.2	7.5	15.2	20.9
9월	24.4	22.9	22.9	24.8	27.5	20.4	20.3	21.1	27.6	22.3
12월	15.3	19.5	16.9	18.9	23.5	14.0	16.0	16.5	20.5	22.5
1998년 3월	3.6	8.6	5.5	5.2	5.4	6.4	5.5	2.3	10.4	5.6
6월	8.7	14.8	12.9	9.8	12.0	13.6	12.0	7.2	17.0	13.0
9월	14.1	22.5	22.8	21.1	24.7	14.7	23.4	15.9	22.2	24.2
12월	5.7	16.9	20.8	22.6	24.9	13.6	22.6	15.0	15.0	22.1
1999년 3월	5.7	16.9	20.8	22.6	24.9	13.6	22.6	15.0	15.0	22.1
6월	8.3	16.3	18.9	20.1	22.0	7.1	18.8	15.1	16.8	19.6
9월	9.4	17.7	24.5	24.3	24.0	13.4	22.8	15.0	20.8	22.1
12월	2.1	11.9	17.1	21.3	22.2	21.0	19.7	12.9	12.0	15.5
2000년 3월	10.6	10.2	15.7	16.8	14.9	12.7	14.9	12.5	12.7	13.7
6월	3.4	13.6	14.4	20.3	14.9	6.0	14.6	14.8	15.0	16.4
9월	1.5	10.3	16.2	19.9	19.9	7.2	14.6	13.3	13.6	19.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및 매월 자료.

&lt;부표 7&gt; 실업자 중 장기실업자의 비중: 전직장의 이직사유와 종사상 지위

	이직사유			종사상 지위			
	정리해고	정년퇴직	기타	상용직	임시·일용	자영업	무급종사
1993년 12월	25.4	0.0	20.3	22.1	17.3	30.3	10.6
1994년 3월	23.7	77.7	13.7	15.0	12.2	25.6	0.0
6월	14.5	0.0	12.8	14.5	10.8	16.7	9.2
9월	12.6	0.0	16.3	17.8	12.2	22.9	35.1
12월	7.9	0.0	11.9	10.7	9.7	17.3	9.6
1995년 3월	10.3	0.0	12.9	14.4	9.8	18.7	21.3
6월	8.3	37.4	11.7	10.3	10.9	16.3	0.0
9월	7.8	0.0	12.7	12.0	10.3	18.4	0.0
12월	12.9	50.0	18.0	16.9	16.6	20.3	41.2
1996년 3월	8.0	0.0	11.8	10.5	9.3	19.6	7.6
6월	17.0	0.0	8.2	7.7	8.8	13.6	0.0
9월	11.0	100.0	11.2	10.6	11.4	14.2	0.0
12월	8.9	0.0	14.3	11.0	13.3	18.7	15.4
1997년 3월	8.5	0.0	9.5	9.4	7.6	13.4	10.7
6월	6.5	21.1	11.1	11.9	8.0	15.9	25.2
9월	17.2	29.3	19.3	13.6	17.6	34.7	0.0
12월	6.5	0.0	20.7	13.4	16.0	20.1	8.6
1998년 3월	4.4	5.4	5.1	5.6	4.6	5.2	0.0
6월	12.7	30.0	9.8	13.7	9.2	13.7	2.5
9월	24.2	22.1	16.6	26.6	15.7	23.2	6.5
12월	23.7	14.2	13.1	25.9	12.5	22.5	3.1
1999년 3월	23.7	14.2	13.1	25.9	12.5	22.5	3.1
6월	24.6	6.8	10.8	23.0	12.4	12.6	3.6
9월	23.6	22.8	14.8	24.3	14.3	19.0	6.4
12월	27.6	57.9	10.4	25.1	9.9	14.9	8.1
2000년 3월	18.6	19.3	9.7	18.6	8.5	15.2	8.1
6월	18.0	7.5	10.9	13.0	11.4	12.6	5.6
9월	15.8	19.2	10.6	11.1	9.2	19.4	30.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및 매월 자료.

&lt;부표 8&gt; 실업자 중 장기실업자의 비중: 전직장의 산업과 직업

	산 업					직 업			
	광공업	건설업	도소매음식	전기운송	사업개인	전문기술	사무직	서비스판매	기능조작
1993년 12월	25.4	20.4	19.8	25.3	15.2	29.4	30.6	19.3	16.2
1994년 3월	14.4	10.9	17.2	13.5	17.1	26.2	15.5	17.4	10.9
6월	11.3	15.6	11.1	12.3	19.3	19.7	4.1	14.4	14.2
9월	16.0	11.1	18.2	20.5	13.1	19.8	17.1	19.9	12.6
12월	15.5	8.0	11.1	13.8	7.0	10.3	15.4	13.2	9.6
1995년 3월	14.5	6.3	12.7	27.9	7.4	13.3	8.6	10.7	14.5
6월	6.0	5.3	13.0	27.6	13.1	14.2	7.9	12.9	11.1
9월	9.9	6.5	13.6	24.1	13.8	10.4	16.2	12.9	10.2
12월	14.6	17.7	21.8	14.7	16.2	15.3	20.3	25.4	12.9
1996년 3월	12.0	11.7	12.1	9.4	9.4	14.9	13.1	11.4	9.5
6월	6.5	14.0	10.4	13.6	3.6	2.9	11.4	11.6	8.6
9월	11.4	15.2	11.0	5.7	10.5	6.1	14.7	14.2	10.1
12월	14.0	10.8	16.2	9.7	11.3	19.7	12.0	14.3	11.1
1997년 3월	7.2	9.6	11.8	2.0	9.3	8.6	7.1	11.0	9.2
6월	12.3	6.0	8.5	16.2	11.7	7.3	9.4	12.1	10.7
9월	16.8	15.5	20.0	25.2	19.2	17.9	14.1	21.6	18.9
12월	13.6	12.7	19.2	22.0	15.8	17.8	12.9	20.4	14.2
1998년 3월	6.0	2.3	6.3	5.2	4.7	6.5	4.8	6.4	3.8
6월	12.4	7.6	11.5	9.9	12.8	15.4	11.2	12.0	9.1
9월	23.1	17.9	18.2	22.6	15.9	23.3	22.4	16.6	18.6
12월	22.4	15.8	14.8	20.4	10.3	21.6	14.0	14.3	16.3
1999년 3월	22.4	15.8	14.8	20.4	10.3	21.6	14.0	14.3	16.3
6월	20.6	13.1	13.9	15.9	8.6	14.1	16.7	12.5	14.1
9월	15.7	17.3	16.3	29.6	13.9	18.2	28.1	13.4	15.7
12월	13.6	10.3	12.0	14.2	16.3	18.4	17.8	10.6	11.7
2000년 3월	10.5	10.1	8.7	10.4	15.5	15.5	12.7	9.5	10.2
6월	11.5	9.2	0.7	8.9	15.2	14.9	16.6	8.3	11.7
9월	9.5	4.7	13.8	13.5	13.1	13.8	12.7	9.4	11.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및 매월 자료.

◆ 著者 略歷

• 금 재 호

- 미국 미네소타 경제학 박사
- 대우경제연구소 연구위원
- 現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장기실업자의 구조변화 및 정책과제

- 발행연월일 2001년 2월 26일 인쇄  
2001년 2월 30일 발행
- 발 행 인 이 원 덕
- 발 행 처 **한국노동연구원**  
1510-01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2 중소기업회관 9층  
☎ 대표 (02) 782-0141 Fax:(02) 786-1862
- 조판·인쇄 성문인쇄사 (02) 2272-7553
- 등 록 일 자 1988년 9월 13일
- 등 록 번 호 제13-155호

© 한국노동연구원